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로

절멸의 무기 핵무기에 반대한다

2025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부쳐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로

절멸의 무기 핵무기에 반대한다

2025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부쳐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로

: 절멸의 무기 핵무기에 반대한다

2025년 80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부처

발행 2025.7.29.

퍼낸곳 사회진보연대

팩스 02-778-4006

홈페이지 www.pssp.org

메일 pssp4001@gmail.com

**책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로**

목차

소책자를 펴내며	5
핵 신화와 핵 경쟁의 역사 :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전쟁	49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발자취	111
핵무기 없는 한반도부터 만들자	141
소책자를 마치며	201

소책자를 펴내며

인류는 80년 전 무엇을 겪었나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실전용 핵무기인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투하되었습니다. 사흘 후인 9 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역사상 두 번째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실전에 쓰인 핵무기인 원자폭탄 ‘팻 맨’이 투하되었습니다. 각각 단 한 개의 폭탄만으로 이 두 도시는 한순간의 섬광과 함께 폐허가 되었고, 합계 20만 명 이상이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여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한반도는 해방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난 뒤 가장 중요했던 과제는 이와 같이 참혹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국제연합(UN)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UN헌장 서문)

즉, 1·2차 세계대전을 낳은 식민지배와 식민지 쟁탈 경쟁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모든 나라의 평등을 인정하고, 과거와 같이 이를 무력으로 침해하는 일은 금지하며, 만약 그런 침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알려진 모든 무기의 위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절멸의 무기’ 핵무기의 등장 또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에, 전후(戰後) 수습에서 핵무기는 단연 중대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UN총회의 제1호 결의는 다름 아닌 “핵무기 폐기는 UN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반핵평화운동이 태동했습니다.

돌아온 핵 경쟁의 시대

그러나 80년 전의 역사를 잊어버린 듯,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의 세계는 점점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고, 이에 이란과 핵 협상 중이던 미국도 태도를 바꿔 토마호크 미사일과 초대형 폭탄 ‘병커버스터’로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년째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탄생한 UN으로 대표되는 ‘전후(戰後) 세계질서’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각국에서 발호하는 자국우선주의와 포퓰리즘 운동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냉전과 함께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것 같았던 핵 군비경쟁도 부활했습니다. 매년 세계의 무력분쟁과 군비지출, 핵 확산 현황을 추적하여

연감을 발간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월 16일, 2025년 연감을 발간하며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된, 세계의 핵무기 수가 줄어들던 시대가 끝나가고, 대신에 핵무기 증가, 핵에 대한 강경한 수사, 군비 통제 합의 폐기라는 뚜렷한 추세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온 핵 경쟁의 시대는 어쩌면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푸틴 1인이 지배하는 러시아와 예측불허의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의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고, 중국이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핵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며 다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비 확대를 자극하는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약 50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모든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문명을 말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다면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80년 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핵 군비경쟁의 개시가 세계적인 반핵평화운동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듯이, 오늘날 세계에는 핵 경쟁의 부활에 맞서 대안을 조직하는 흐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이 보기에, 새로운 전염병 대유행의 가능성이나 기후변화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데에 반해, 핵전쟁으로 인한 종말 가능성은 인류가 노력한다면 완전히 종식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핵전쟁을 궁극적으로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가 여전히 한창이던 2021년 1월 22일, 공식적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그러한 길입

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개발, 시험, 생산, 비축, 배치, 전달, 사용, 사용 위협 등)을 금지하는 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목표는 전 세계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2017년 UN총회에서 투표할 당시 122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2025년 여름 현재 73개국이 비준한 만큼 핵무기금지조약에 참여하는 나라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가 핵무기 보유가 ‘불법’, ‘비도덕’ 행위로 여겨지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아직은 인류가 함께 이 절멸의 무기를 통제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이 기존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0주년을 맞은 NPT는 핵 군비확장과 핵전쟁 위협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에 부족했습니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을 제외한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이 등장하는 것만을 막는 ‘비확산’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반핵평화운동은 NP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여겨지는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의 성공적인 발효에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 행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조건(50개국의 비준) 충족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러 나라들에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비준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는 전례가 없는 일로,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금지조약으로 상징되는 핵군축 여론을 의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020년대 현재 핵무기금지조약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어 인류 역사상 3번째 핵무기 실전 사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국제 여론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사용 위협이 개시된 뒤인 2022년 6월 열린 제1차 UN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회의에서 66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빈 선언’은 모든 핵무기의 철폐가 세계 핵 위기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해답이며 핵무기금지조약의 목표임을 확고히 하며, “핵무기의 어떤 사용 또는 사용 위협도 UN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임을 강조한다”, “NPT를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협과 행동을 유감으로 여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우리의 힘으로

안타깝지만 아직 이러한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흐름을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선 오히려 ‘남한 독자 핵무장’을 외치는 보수진영과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자주파’의 목소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언뜻 극과 극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대국들의 침략과 간섭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완전히 같은 논리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한반도와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주장일 따름입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핵무기란 어떤 무

기인가”(1부)라는 성찰에서 시작합니다. 그다음으로 세계 핵 경쟁의 역사(2부)를 분석하며, ‘핵 억지론’은 신화일 뿐 핵무기가 있는 한 핵전쟁의 가능성은 사라질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발자취(3부)를 따라간 뒤, 한반도 핵의 역사를 돌아보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한반도에서부터 만들자”(4부)고 주장합니다.

남한 핵무장론과 북핵 옹호론 양자를 물리치고, 평화롭고 평등한 한반도와 세계를 열어갈 힘은 우리 노동자·시민에게 있습니다. 이 소책자가 그 길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29일

사회진보연대

1부

핵무기는 어떤 무기인가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출처: AEC>

1부

핵무기는 어떤 무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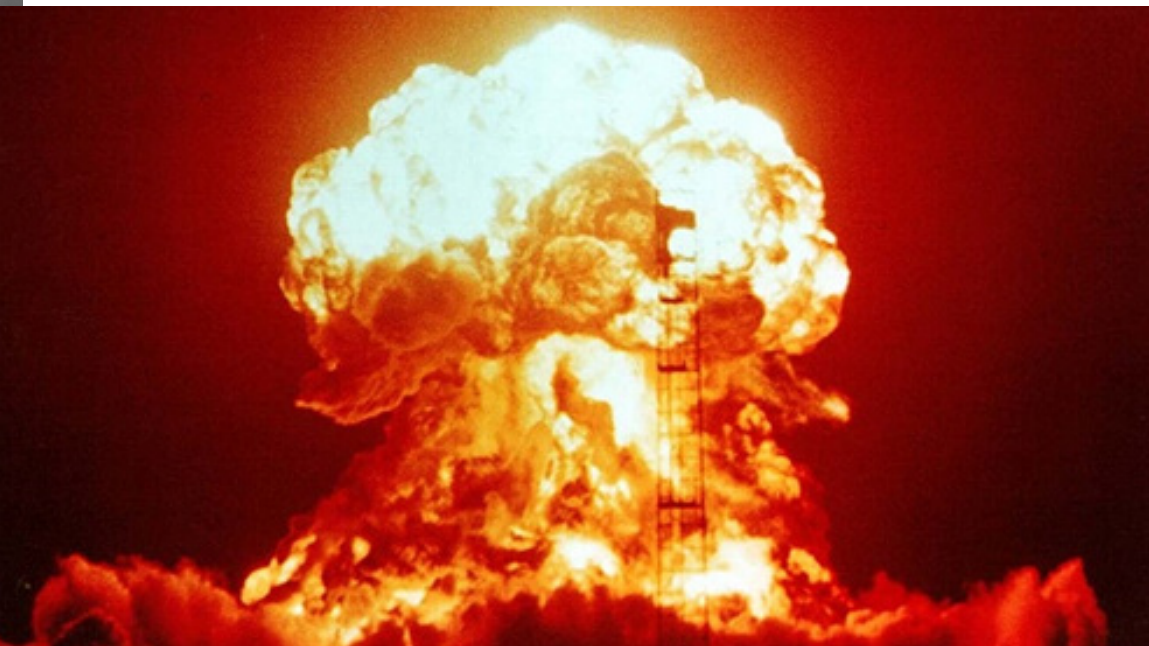


그림1 인류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출처: AEC]

평생에 걸쳐 반핵운동을 펼친 철학자 귄터 안더스는 인류가 만들어 낸 기술의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그 파괴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사이에 괴리가 점점 커진 비극을 이야기했습니다. 핵무기의 위력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핵무기의 존재에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의 말대로 핵무기가 절멸의 무기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

이 정확히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는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핵무기 없는 세계’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안에 밀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느껴지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무기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핵무기는 그 가공할 위력으로, 인류 전체가 절멸할 수도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사상 최초로 열었습니다. 둘째로, 핵무기의 폭발은 전통적인 폭발보다 훨씬 더 강한 열과 빛을 방출하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래도록 영향이 남는 방사능 피폭을 유발하므로, 핵무기는 핵폭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기는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셋째로,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과 국제정치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무기 통제 권한은 밀실의 극소수에게 주어지는 반면, 실제 핵전쟁 발발 시에는 엄청난 규모의 민중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대칭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 핵은 절멸의 무기

핵무기는 단 한 발로도 폭발 시 즉각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여 전투원 여부나 국적, 이념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며, 환경 전반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살아남은 이들도 피폭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 최초의 핵무기인 원자폭탄 ‘리틀 보이’만 하더라도, 이전까지 인류가 알던 무기와 차원이 다른 파괴력으로 중소규모의 도시인 히로시마를 초토화시켰

습니다. 원폭 투하 직후 이를 겪은 이들은 이 상상을 초월한 무기의 정체를 몰랐으나, 확실히 과거의 모든 무기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신형 폭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핵무기란?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통해 재래식 폭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핵무기로는 크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있습니다.

수소원자폭탄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고, 원자는 원자핵과 그 주변을 떠도는 전자로 구성됩니다. 원자핵의 질량이 무거운 물질, 대표적으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의 원자핵을 쪼개는 것이 핵분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 1g이 핵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석유 1800리터나 석탄 약 3톤이 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핵분열을 이용한 무기가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핵을 한 번 쪼개는 것으로 무기를 만들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모은 뒤, 그 속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나온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을 분열시키고, 이것이 반복되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핵발전도 핵분열을 이용합니다.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생긴 에너지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핵발전은 핵무기에 비해 연쇄반응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고, 무기용보다 농축 정도가 낮은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 보이’에는 우라늄이, 나가사키

에 투하된 원자폭탄 ‘팻 맨’에는 플루토늄이 들어갔는데,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는 핵탄두의 재료로 쓰여 북한, 이란 등의 핵무장과 관련한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수소폭탄

원자폭탄이 핵분열을 이용한다면,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이용합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더 효율적이고 위력이 강해서, 오늘날 세계의 핵무기들은 대개 수소폭탄입니다. NPT 체제 내의 공식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 배치 중이고, 그 외 유일한 사례로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융합은 핵분열과 반대로,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때에도 핵분열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단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핵융합하여 만들어집니다.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원자핵을 초고온으로 가열해야 해서 ‘열핵폭탄’이라고도 하지만, 현실의 열핵폭탄은 전부 수소를 사용하므로 흔히 수소폭탄이라 부릅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뇌관으로는 원자폭탄이 사용되는데, 미국은 이를 레이저로 대체하는 ‘레이저 핵융합’을 개발 중입니다.

중성자탄

중성자탄은 강화 방사능 폭탄으로도 불리는데, 사용 목적을 달리하기 위해 수소폭탄을 변형하고 소형화한 것입니다. 무기 내 핵융합 과정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무기 외부로 방출하여 강력한 중성자선을 발생시킵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에 비해 폭발력이 약하지만, 대신 폭발과 열을 견디도록 설계된 시설, 전자 등도 통과하는 중성자선을 통해 인명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력

냉전과 함께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되자 이미 무시무시한 핵무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적으로, 핵무기의 첫 등장으로부터 16년이 지난 1961년, 소련이 만든 수소폭탄 ‘차르 봄바’는 위력이 리틀 보이(15kt)의 3300배 이상인 50Mt에 달했습니다. (다만, 실제 투하되었을 때의 파괴력은 핵출력 차이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00Mt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지만 방사능 피해를 고려해서 위력을 반으로 줄인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너무나 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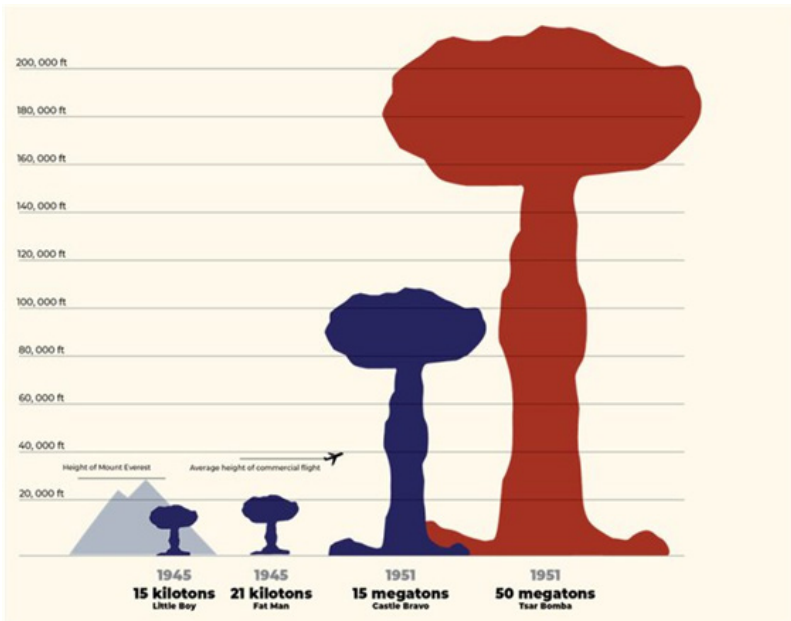


그림 2 최초의 핵무기인 원자폭탄 리틀 보이(히로시마), 팻 맨(나가사키)의 위력과 이후 미국(캐슬 브라보)과 소련(차르 봄바)이 개발한 수소폭탄들의 위력 차이. [출처: 미국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

한 무기는 오히려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핵무기 위력 자체를 두고 벌어진 경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존재하는 핵무기 대부분은 여전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의 위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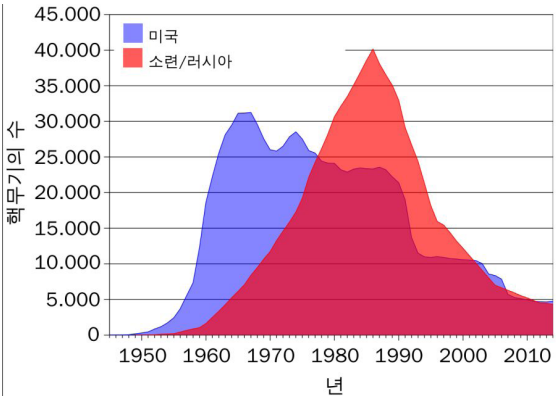


그림 3 1950~2010년대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 [출처: 위키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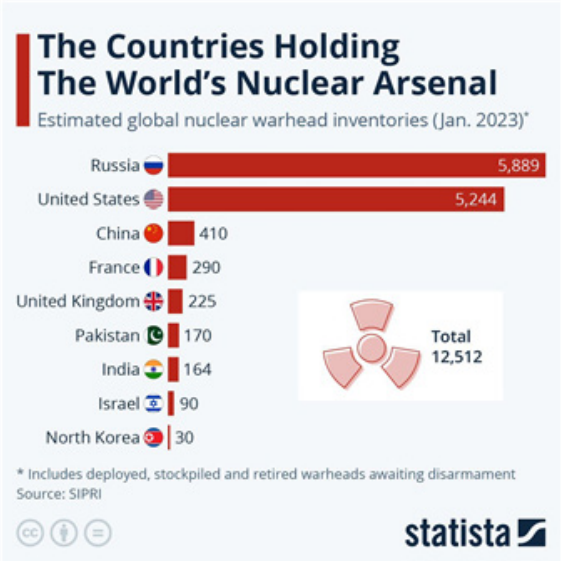


그림 4 2023년 1월 기준 세계의 핵탄두 보유량 [출처: 통계/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그래프/statista]

훨씬 초과합니다.

냉전 시기 핵 경쟁은 핵무기의 위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숫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냉전 말기인 1980년대에 는 미국과 소련의 핵탄두 보유량을 합치면 무려 7만 기 가량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에 합의하여 사거리 500km~5,500km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이를 시작으로 냉전 종식이 개시된 이후에 여러 핵군축 조치가 있었음에도, 오늘날 에도 여전히 최소 1만 2천 기 이상의 핵무기가 세상에 있습니다.

유명 교양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가 과학자 들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에는 4,500여 개의 도시에 30억 명이 살고 있고, 도시들의 크기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핵폭탄 세 개면 도시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세계에는 이 4,500여 개 도시와 30억 명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핵무기가 존재합니다.



핵폭발에서 살아남은 지역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핵 겨울’이 거론됩니다. 역사 속에는 거대한 화산 폭발이 나 화재로 발생한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식량난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핵 경쟁이 한창이던 냉전 당시 과학자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본 적 없는 규모로 검은 먼지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이나 햇빛을 차단하고 기온이 급강하하는 ‘핵 겨울’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규모는 구체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1980년대 당시 저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과 동료 과학자들은 전면적인 핵전쟁은 빙하기와 유사한 규모의 ‘핵 겨울’을 일으켜 지구 전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도시에 폭탄이 터진다면?

핵무기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효과를 제대로 알면, 핵무기는 없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발의 핵무기 사용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는 다양한 주제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다룹니다. 그 중에서 ‘대도시에 폭탄이 터진다면?’은, 영상에서 뭘 폭발시키는 것은 재미있지만, 진짜 삶에서의 핵폭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어 음성과 자막이 있으니,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영상은 ‘핵폭발은 당신에 대한 것’이라며, 오늘날의 대도시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고, 버섯구름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창가로 달려가면, 곧 창문 유리가 부서지고 유리 조각이 폭풍처럼 휘날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구조대가 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번에는 올 구조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핵폭발은 모든 자연재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허리케인과, 산불과, 지진과, 핵발전 사고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총체적인 붕괴로 문명은 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무너졌을 것이고 의료인들도 다른 이들과처럼 죽거나 다쳤을 것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은 없습니다. 지구상 어느 국가도 이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낙진과 재가 섞인 ‘검은 비’가 내리면, 해롭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방사능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백혈병이나 암

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영상은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핵 억지론’을 비판하며,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미쳐서 날뛰거나, 작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소한 오해가 생겼을 때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답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UN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소개하면서, 누가 핵무기를 가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에 대한 위협인 핵무기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적과 이념에 관계없이 모두가 핵무기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고 마무리합니다.

핵 겨울의 가능성과 파괴력이 과장되었다는 반론이 나와 오늘날까지도 핵 겨울은 과학자들의 논쟁 대상이지만, 인류 전체의 위기를 상징하는 핵겨울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당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 정치인들이 핵군축과 냉전 종식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군축을 결단하고 합의한 과정은 2부를 참고하세요.)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인류에 대한 존엄성과 도덕성을 생각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에 극도로 파괴적인 핵 겨울이 결코 일어나지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대 정세와 핵

그러나 2025년 현재에는 오히려 탈냉전 이후의 핵군축 기조가 역전되고 세계의 핵무기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

락 중인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서방에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 핵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위협의 일환으로 전쟁 중에도 계속 핵탄두 공격 모의 훈련, 핵전력 기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마지막 남은 미러 간 핵통제조약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미국과 러시아의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러시아 전술핵무기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올해 6월 푸틴 대통령은 3대 핵전력,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최근 핵무기의 수와 종류를 상당히 늘리고 있는데, 2024년 6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3년 410기에서 2024년 초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면 2030년 중국의 핵탄두는 1천 기를 넘길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미국도 핵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실질적인 정책 자료집으로 여겨지는 『리더십의 사명: 보수의 약속』은 매년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하는 ‘핵과학자회보’가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래 가장 극적인 핵무력 증강”이며 1960년대 초반 이래로 없었던, 수많은 국가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촉발할 수 있다고 평가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집은 다른 안보 프로그램보다 핵무기 개발 및 생산을 우선시하고, 모든 핵무기 개발 및 생산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의회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대안을 찾으라고 요구해도 무시하고, 현존 조약들의 한도를 초과하여 핵무기 수를 늘리고, 미국이



그림 5 2024년 5월 21일 러시아 군인들이 남부 군관구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첫 번째 단계의 전술 핵무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러시아 국방부/로이터]

1990년대 이후로 하지 않았던 일반 핵실험을 재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1기인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핵군축조약인 INF(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도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INF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 계속 중거리 핵전력을 늘리고 있으므로, 미국만 INF의 제한에 묶여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냉전 시기 서유럽에 소련을 견제하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처럼, 동아시아 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략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란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보다도 약한 1~5kt 정도로 위력을 낮춘 핵무기를 말합니다. ‘저위력’이라고 해도, 반경 2km 내를 초토화할 수 있으며 지하 병커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재래식 무기와 비교하면 매우 강력합니다.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지시한 것은 냉전 당시 최소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위력의 핵무기는 마찬가지로의 보복을 당할 우려, 즉 소위 ‘상호확증파괴’(MAD)의 가능성 때문에 실전에서 쉽게 쓸 수 없었으므로, 핵무기의 위력을 낮추면 핵무기 사용의 문턱도 낮춰 ‘실전에 쓸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저위력 핵무기를 미국의 폭격기나 핵잠수함에 탑재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 없이 북한이나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실전이 그런 식으로 흘러 갈 것이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다시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듯 핵전쟁은 가장 유력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핵과학자회보’가 매년 우리가 지구의 종말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평가하는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지구 종말 시계는 역사상 자정, 즉 지구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인 자정 89초 전에 와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과 소련이 원자폭탄보다 훨씬 파괴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시행한 1953년의 자정 2분 전이 가장 지구 종말에 가까웠던 때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INF와 이란 핵합의(JCPOA) 파기,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2018년에 다시 자정 2분 전이 됩니다.

시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핵군축 협정을 중단하고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자정 100초 전으로 당겨졌고, 2023년 다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전쟁 위협, 북한의 ICBM 발사 시험 재개 등을 근거로 90초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여전히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초 89초 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류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세계 다른 곳에 비해서도 핵전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일단 핵전쟁에 휘말린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비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핵폭탄 투하로부터 살아남더라도, 피폭 문제가 남습니다. 한반도와 같이 좁은 전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서울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만약 서울에 핵무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유이한 사례인 히로시마·나가사키와 비교하면, 현재 서울·수도권은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보다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

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핵무기의 위력 역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한 시나리오들은, 서울이 핵공격을 받으면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을 참상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상기획위원회 보고서 (1999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비상기획위원회(2008년 행정안전부에 소관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는 1999년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의 형태, 분쟁으로의 전개과정, 분쟁 형태별 예상피해 판단 및 비상대응업무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양상별 예상피해’를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한 마디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상황에서 1Mt의 핵무기가 폭발하면 서울의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사람의 흔적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서울 광화문네거리에 1Mt급 핵폭탄이 터졌을 경우를 상정하고, 그 피해를 아래와 같이 예상합니다.

- 광화문네거리에서부터 2km권 이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즉각 사망하고, 지상건물은 완전파괴 및 소실되어 텅 빈 폐허의 공간이 될 것이다.
- 5km권 이내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사망할 것이고, 지상 건물 역시 완전히 파괴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뼈대도 고열의 복사선으로 엇가락처럼 휘어져 버릴 것이다.
- 10km권 이내에 있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사망하게 되고, 지상 건물은 초속 62m의 강풍으로 완파 또는 반파될 것이며, 화재 발생으로 대부분의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 15km권 이내의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할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마저도 대화재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질식할 것이며 지상 건물은 완파 또는 반파될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주요 시설과 서울시 전역 대부분, 그리고 서울시
에 거주하는 대략 '천만 명'의 90% 이상이 광화문으로부터 15km 내
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 한 발의 핵무기로도 서울과 같은 거
대한 도시가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보고서 (2017년)

2017년, 국방연구원은 국방부의 의뢰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스커
드 미사일에 20kt 규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뒤 서울 도심 상공 100m
에서 터뜨린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피해 규모를 예상했습니다.
20kt는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과 비슷하고, 위의
비상기획위원회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것의 50분의 1 규모입니다. 보
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폭발까지 5분 전후가 걸
리고,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4분 정도입니다. 이에 따
라 최대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폭심지에서 1km 안쪽의 사람들은 폭발 즉시 90~100%가 사망합
니다. 이를 뒤면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생존했더라도 구조나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이 바람을 타고 수도권까지 퍼져, 낙진 효과가 전체
인명피해의 70~80%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만약 골든타임인 이틀(48시간) 안에 낙진을 피
해 생존자를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킨 뒤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초동 조치가 적절히 취해진다면 최소 예상 인명피해의 2% 수준인 5
만 명까지로 줄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현재 이러한 대응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5만 명이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도
저히 없을 것입니다.

2. 핵무기는 비인도적 무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 인구의 30%인 7만 명이상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화상과 부상, 피폭 등으로 그해 말까지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면 최대 16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나가사키에서도 3만 명이상이 즉사하고 그 해 말까지 7만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핵무기는 단 한 발을 사용한 즉시 셀 수 없는 사람이 사망하는 대량살상무기로, 이전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입니다.

그러나 즉사한 사람은 차라리 운이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핵무기는 폭발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깁니다. 히로시마 출신 만화가 나카자와 케이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반핵만화 『맨발의 겐』에는 화상으로 온몸의 피부가 녹아내려 수십 센티미터씩 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폭풍에 휩쓸려 날아가 나뭇가지에 꽂혀 숨을 거두는 모습, 하천에 가득 쌓인 시신들이 부패하여 터지는 모습 등 당시 히로시마의 참혹한 광경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반전운동가였던 작가의 아버지나 히로시마에 끌려와 일하던 조선인들도 원폭으로 목숨을 잃은 현실에서, 핵무기 앞에서는 국적이나 이념의 차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존 피폭자까지 포함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는 70만 명 가량이었는데, 이들은 살아남아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주요 질병들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심지어 원폭피해자 2세들의 사례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세대를 넘은 피폭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50%의 폭발, 35%의 열, 5%의 초기방사선과 10%의 잔류(2차)방사선으로 구성됩니다. 초기방사선은 폭발 후 1분 이내에 방출되며 그 이후는 잔류방사선으로 구분합니다. 초기방사선은 허공에서 직진하므로 폭심지에서 거리가 멀수록 적게 피폭되며 차폐물도 효과가 있습니다.

잔류방사선은 초기방사선에 쏘인 흙이나 건물, 혹은 ‘검은 비’나 ‘죽음의 재’에서 나오며, 오랫동안 인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검은 비’란 원폭 투하 후에 내린, 핵폭발로 인한 진흙이나 먼지, 그을음 등이 섞인 비로 강한 방사능을 띠니다. 1945년 8월 6일 당시 히로시마에서는 원폭 투하 후 약 2시간 동안 ‘검은 비’가 내렸는데, 직접적인 폭발의 여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폭발 당시에 히로시마 시내에 없던 사람들도 이 비를 맞고 대규모로 피폭되었습니다. 그 결과 탈모, 출혈, 급성백혈병과 같은 급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원폭 투하를 겪고 6년 만에 피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방사선 전문의 나가이 다카시가 쓴 수기 『나가사키의 중』도 폭발 당시 살아남은 이들이 소화기 장애, 무기력증, 두통, 오심, 구역, 현기증, 탈진 등을 겪다 결국 급성 증상을 보이며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영향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원폭 폭발 당시 건물 안에 있어서 찰과상 하나 입지 않았던 사람들, 멀쩡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간호하고 잔해 정리를 하던 사람들도 피폭 한 달 정도가 지나자 갑자기 40℃ 이상의 고열과 출혈, 급성 백혈병 증상을 보여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조선인·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일본 사회와 일본 반핵평화운동에서 원폭피해자가 차지하는 엄청난 위상과 달리,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놀라울 만큼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원폭 투하에 의한 조선인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0% 가량으로, 총 사망자 5만 명, (당시) 생존자 5만 명, 총 1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하자면 한국과 한국 시민도 피폭의 '당사자'이며, 한국은 제2의 피폭국인 것입니다.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핵무기는 국적, 이념을 따지지 않고 목숨을 앗아가는 절멸의 무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핵 정책을 시종일관 지지한 전후 한국 정부는 '반핵'을 주장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도 의도적으로 금기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피폭 생존자 중 대다수가 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2,261명이었고, 현재에도 원폭피해자 1세, 2세가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45년으로부터 74년이 지난 2019년 4월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정도입니다.

2016년 5월에서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1945년 8월 피폭 당사자와 당시 태아였던 사람만이 대상이어서 원폭피해자 2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3월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임을 밝힌 고 김형률 씨는 선천성 면역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 3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2013년 경상남도의 도내 원폭피해자 2세 건강 상태 조사에 따르면 13.9%가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후손 건강·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폭피해자 2세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주요 질환 유병률이 최대 8.4배 높았고, 전반적으로 건강 수준이 좋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을 경험한 히다타로와 같은 일본 의사들의 수기에 따르면, 당시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관한 경험이 없어 겉으로는 생명이 지장이 없어보이던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죽어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의료진도 많았고, 설령 피폭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도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미국 역시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 1946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관련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오랫동안 일본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인도적 무기 철폐의 선례들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무차별적으로 안기는 무기를 우리가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인류 절멸의 위험을 야기하며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남기는 핵무기를 불법화하자는 것은, 관련한 UN총회 결의 표결 결과가 말해 주듯이 이미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입니다. 모든 핵무기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은 핵무기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2017년 UN 핵무기금지조약의 출범으로 결실

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와 같은 공식 핵보유국들, 북한과 같은 비공식 핵보유국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아직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3부를 참고하세요.)

핵무기 철폐를 위한 조약에는 참고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대량살상 무기’(WMD)란 통상 화학무기, 생물무기, 핵무기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화생방’ 또한 화학·생물·방사능(핵)무기의 줄임말이죠. 이러한 무기들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남기거나 인체에 잔혹한 영향을 미치는 ‘비인도성’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무기도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지요.

이와 같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세계 사회운동의 노력으로, ‘화생방’ 중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는 각각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7년 발효)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생물·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자랑하거나, ‘생물무기를 개발할 권리’ 운운한다거나, 페스트나 소아마비 균이 정당한 공격무기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네이팜탄(1983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발효), 대인지뢰(1999년 대인지뢰금지협약 발효), 확산탄(2010년 확산탄금지협약 발효) 등 악명 높은 ‘비인도적 무기’들이 같은 길을 밟았습니다. 애초에 세상에 좋은 무기란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피해를 입히는 무기들만큼은 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약을

비인도적 무기와 한반도

세계의 절대 다수가 다양한 무기 금지 협약에 동참하는 가운데, 남 북한은 ‘분단 상황’을 근거로 가입하지 않은 ‘예외’로 남아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지뢰를 밟은 남한 병사를 북한 군인들이 구해주면서 시작하는데, 실제로 여전히 비무장지대(DMZ) 내부와 주변에 지뢰가 최대 100만 개 가량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북한 모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발효된 확산탄금지협약(CCM)에도 남북한 둘 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확산탄(clusters, 집속탄이나 모자탄이라고도 함)은 한 개의 폭탄(모폭탄) 속에 수많은 또 다른 폭탄(자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입니다. 모폭탄이 터지면 수백 개의 소형 자폭탄들이 쏟아져 나와 폭발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냅니다. 생화학무기는 너른 전파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설계됩니다.

한편 북한은 대표적 대량살상무기인 ‘화생방’ 중 핵무기 말고도,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 불리는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는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생물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미 국방부 육군부의 ‘북한 전술 보고서’는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이 최대 5천 톤에 달해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60년대부터 생화학무기 연구를 시작했고 탄저균과 콜레라, 황열병, 천연두, 티푸스 등을 무기화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생화학무기를 미사일로 쏘 경우, 단 1kg의 탄저균으로 서울 시민 5만 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통해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시킨 다음, ‘불법’, ‘비도덕’이라는 낙인을 찍고 국제무대에서 퇴출하는 과정을 통해, 무기의 생산·거래·사용을 막는 흐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무기수출국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국제적인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의 생산과 사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주장했듯, 아직까지 핵무기에 관해서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이를 개발, 배치하는 나라들에 도덕적 낙인을 찍어, 핵무기 또한 다른 비인도적 무기들의 뒤를 따라 퇴출시키는 것이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구상입니다.

3. 핵무기는 반민중적 무기

핵무기는 민중을 타겟으로 삼는 무기

1차, 2차 세계대전은 8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중 비전투원(민간인) 비율은 3/4 가량으로, 전투원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위 승계 등 지배계급의 이해관계 위주로, 전투원 위주로 전쟁을 수행하던 과거와 달리 20세기에 들어 전쟁은 민족국가 구성원 전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민족주의 이데

올로기는 인민을 총동원하여 병력을 충원할 뿐만 아니라 산업, 과학기술 등 국력을 총동원하는 과정을 정당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의 군대 뿐만 아니라 교전국의 산업 기반 시설, 교전국 인민의 전쟁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와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과 달리 노동자 민중이 병력, 노동력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키는 것이 전쟁의 주요 전략이 되는 시대를 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국들이 대량살상과 대량파괴를 위한 폭격 무기 개발에 전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핵무기 개발 역시 나치 독일과 미국의 ‘절대무기’ 개발 경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실제로 1945년 미국이 핵무기를 2차례 투하하여 일본 국민의 전의가 상실된 결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 버섯구름은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추축국에 맞선 연합국의 승리와 ‘파시즘에 맞선 시민들의 영웅적 투쟁’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력이 전쟁 종식의 상징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한반도에서는 ‘핵이 평화를 가져왔다’, ‘핵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다’는 관념까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전 이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의, 이렇게까지 비인도적인 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불가피했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세계 각지에서 반핵평화운동이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기여했던 과학자들 중에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참상을 목격한 뒤에는 평생 반핵운동의 길을 걸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반핵운동과 전후 반핵운동의 부상에 관해서는 3부를 참고하세요.) 인도적 측면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당시 전황을 고려하면 과연 원폭을 통해 일본의 항복과 종전을 극적으로 앞당기고 연합국의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소련이 대일본 참전을 결정했고, 8월 초 시점에서는 소련군의 남하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사이인 8월 8일에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고, 다음날부터 소련군 160만 명이 만주 전역의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파죽지세로 하얼빈 등을 점령하고 함경북도까지 도착합니다. 이미 일본을 제외한 추축국들이 항복한 상황에서 소련군의 대규모 남하를 고려하면, 일본이 전쟁을 길게 이어갈 가망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원폭 투하는 전후 패권경쟁에서 소련을 견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 항복과 승전에서 소련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은 7월 16일에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성과였



그림 6 1945년 8월, 일본이 만주에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의 하얼빈을 점령한 소련군의 모습. [출처: 위키피디아]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미국이 일본에 살포한 베라

- 일본 국민에게 고함 -

“즉시 도시를 떠나시오!”

“... 미국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강력한 폭탄을 발명해냈다. 이번에 발명된 원자폭탄은 단 한 발만으로도 B-29[미국 전략폭격기] 2천 기에 탑재한 폭탄에 필적한다. ... 우리는 이제 일본 본토에 이 다른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단 한 발 투하했을 때 어떤 사태가 야기됐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 일본 국민은 즉시 무력저항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 [원자]폭탄 및 다른 뛰어난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종결시킬 것이다.”

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실전에서 검증해 볼 기회 없이 전쟁이 종결되는 것을 피하고, 전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급하게 원폭을 투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왜 미국이 1945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선택했냐는, 인민을 몰살시켜 교전 상대국의 전쟁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핵무기의 목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원폭을 투하한 뒤 일본의 항복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도심에 핵무기를 투하하였습니다. 일본 반핵평화 운동은 미국이 원폭의 실전 위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즉 핵무기

가 평범한 도시에 미치는 파괴력을 알기 위해 일부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투하 장소로 선정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이전까지 미군의 공습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미국은 이와 같이 멸절한 상태의 도시에 원폭이 입히는 피해를 관측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민중이 통제할 수 없는 무기

핵무기는 이와 같이 민중의 대량학살을 의도하며 만들어졌고, 동시에 민중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무기입니다. 2018년 당시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고 위협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 핵 단추는 훨씬 크고 강력하다”고 맞받아쳐, 전 세계가 이 예측하기 어려운 두 개인에 의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며 두려움에 떨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북한이 발표한 새로운 핵무력정책 법령은 선제 핵공격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고,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을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이 서류가방 안의 핵 단추를 누르면 바로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는 통념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이지만,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통령의 판단과 핵 공격 실행이 불과 몇 분 안에 이뤄져야 함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핵전쟁의 근본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핵보유국을 상대로 핵공격을 할 때에는, 상대가 핵무기로 보복하지 못하게끔 상대의 핵무기

부터 공격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핵 공격이 오는 것을 감지한다면, 이쪽에서도 즉각 핵무기를 발사해야만 핵무기가 ‘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반격해야만, 적국이 다음 차례로 우리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할 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는 바로 이런 상황도 소개합니다. ‘How A Nuclear War Will Start - Minute by Minute’ ‘핵전쟁은 어떻게 시작하나 - 시시각각’이란 영상인데, 한국어 자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 후 대략 30분 안에,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있는 핵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대략 12분 만에 미국 본토에 도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격은 대통령이 보좌관들과조차 상의하기 어려운 한밤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판단은 지체 없이 내려져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어렵습니다. 정부 각료들조차 핵 공격 시작 전에 이를 알거나 막기 어려우니,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핵전쟁이 시작되는 것도 이미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실전으로서의 핵전쟁’을 대비하다보면 우발적 핵전쟁 발발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상대에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여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상대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려는 핵 전략을 세우면, 최전선의 최종 군사 책임자들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사전 위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 세계가 핵전쟁 발발에 가장 가깝게 갔던 사건으로 평가받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발표된 소설 『페일 세이프』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핵전쟁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64년에 한 번, 2000년에 또 한 번 조지 클루니 주연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 한국 개봉 제목은 ‘핵전략사령부’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술적 오류로 미군 폭격기 부대에 핵 공격 지시가 전달되고, 소련의 무선 방해로 본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조종사들은 이미 미국이 소련의 핵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미국 정부는 사태를 파악한 뒤 이 사실을 소련에 알리고 함께 핵폭탄 투하를 막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나가사키급 핵폭탄 2개가 모스크바에 떨어지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은 소련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핵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뉴욕에 핵폭탄을 투하합니다. 영화는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뉴욕 시내가 섬광으로 뒤덮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장된 상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쿠바 인근 카리브 해에서 미 해군과 대치한 소련 잠수함 B-59가 이미 전쟁이 발발했다고 오인하고 핵탄두를 탑재한 어뢰를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장교 세 명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핵어뢰 공격의 조건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인 바실리 아르히포프가 끝까지 반대한 덕분에 핵 공격은 실현되지 않았고, 미국과 소련은 코앞까지 닦쳤던 핵전쟁 위기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일로 아르히포프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소련은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이후로도 냉전 시기에는 기술적 오류나 실수를 바탕으로 핵 공격을 감행할 뻔했던 사례가 수없이 존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각국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이를 전제로 한 작전 계획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민중의 개입으로 이러한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핵무기는 민중을 희생시키는 무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각국의 핵무기 개발은 강력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또는 발전주의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향은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북한 등등 제3세계 국가에서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핵무장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군사적 지위를 갖고자 하는 열망, 아니면 반대로 자국이 처한 위기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내부의 모순은 외면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체제를 만든 뒤 중화학공업화와 병행하여 비밀리에 핵무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현실 사회주의 진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을 ‘애국전쟁’이라 부르던 시절에 핵을 개발한 소련과, 중소분쟁 이후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핵을 개발한 중국이 그 예입니다. 핵무장은 ‘사회주의 수호’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현실 사회주의의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소련 체제가 무너진 데에는 주지하듯 미국과의 경쟁에서 군비 지출이 너무나 과다해진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련 정부의 은폐로 냉전 종식 이후에야 알려졌지만, 소련의 비밀 핵 시설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강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는 국가 기밀이었으므로, 소련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피폭당한 강물을 마시고, 강에서 수영하고 낚시를 했습니다. 1957년 9

월의 '키시팀 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다음으로 큰, 역사상 3번째 규모의 핵 관련 사고로 추정되어, 소련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핵무기로 인해 소련 시민 수천 명 이상이 죽었고 수만 명이 피폭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나라든 자국 민중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만, 실제 역사에서 핵무기 개발과 실험의 희생자가 된 것은 바로 그 민중이었습니다.

핵무기는 민중을 분열시키는 무기

나아가 냉전 시기 현실 사회주의 진영의 핵무장은 세계 반핵운동과 좌파운동에 분열을 낳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소련공산당과 각국의 공산당들은 반핵평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핵실험을 하자, 캠페인은 핵무기의 비인도적인 성격을 알리고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대신 서방의 핵 위협 반대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1960년대에 들어 소련이 수소폭탄의 상용화에 성공하고 핵무기의 생산량을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방어용일 뿐이라는 주장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서유럽 공산당원들의 대규모 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1964년 중국의 독자 핵무장과 1960년대 말 중국-소련 대립의 격화로 사회주의 국가 간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또 다시 많은 이들이 환멸을 느끼며 운동을 떠났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경험한 나라로서 너른 반핵평화운동 기반이 있었던 일본도 소련과 중국의 핵무장으로 인한 충격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1954년부터 핵무기 금지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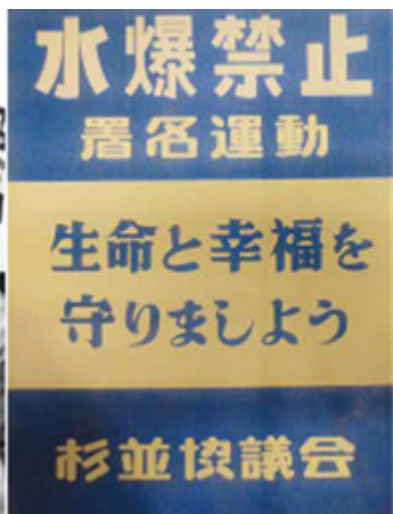


그림 6 1954년, 미국이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시행한 수소폭탄 실험에 일본 어선 제5후쿠류마루 호가 피폭되자, 일본 도쿄 스기나미구 주민들은 수소폭탄 금지를 세계에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왼쪽 사진은 스기나미구 공민관에서 서명용지를 정리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오른쪽은 당시 사용했던 포스터로, “수소폭탄 금지 서명운동: 생명과 행복을 지킵시다”라고 써 있다. 이 운동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어, 1955년 9월까지 당시 일본 내 15세 이상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259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출처: 스기나미구 공식 웹사이트]

한 일본 반핵운동은 1955년 8월 제1회 원수폭(원자폭탄·수소폭탄)금지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릅니다. 대회 조직위는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를 결성하고 반핵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961년 제7회 대회에서 “(이번 대회 이후) 핵실험을 재개하는 정부는 평화와 인도주의의 적으로 규정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며칠 뒤인 8월 30일, 소련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재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원수협 내 사회당계,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계는 소련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산당계가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1962년에는 대회 개최 중에 소련이 핵실험을 하면서 사회당계와 공산당계가 충돌해 대회가 흐지부지 끝나버렸고, 1963년에도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 지지 여부를 놓고 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공산

당계는 이 조약이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고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침략 방지를 위해 용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회당, 총평계는 1965년 원수협을 탈퇴해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라는 별도의 조직을 꾸렸고, 오늘날에도 원수협과 원수금은 별도의 세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후 1973년, 미야모토 겐지 당시 일본공산당 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소대립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의 핵실험도 모두 방위를 위해 강요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핵실험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공산당계가 태도를 전환합니다. 현재 일본공산당은 모든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원칙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폭의 기억이 선명한 당시 일본에서 원수협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았고, 원수협은 단순한 반핵단체가 아니라 일본의 피폭을 불러일으킨 전쟁과 그 전쟁을 시작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단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수협의 분열은 대중적으로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원수협, 원수금,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피단협) 세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에서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모든 입장의 차이를 넘어 핵무기의 비인간성을 일본과 세계에서 호소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일본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혼란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한반도는 핵무기와 역사가 깊습니다. 한반도 출신 민중은 전 세계에서 일본인 다음으로 많이 핵무기의 희생자가 되었고, 한국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한반도 본토 핵 공격이 현실화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과 핵무기에 대해서는 4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23년 말, 김정은 위원장은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강력한 군사행동”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운동은 적극적으로 핵무기 반대를 천명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자 모순이 아닐까요?

한국 사회에서 핵무기 반대 운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한편에는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적 사회운동 안에서도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곧 우리 민족의 핵무기라는 인식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를 옹호하는 모습이 있었던 탓입니다. 핵에 있어서는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침략과 간섭의 역사를 더 겪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상 완전히 같은 논리를 보수 세력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보니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동아시아 비핵지대라는 지향은 사회운동 안에 서조차 쉽게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진보정당 운동의 분열과 위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992년 남한과 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스스로 파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시 진보진영뿐 아니라 각계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었지만,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것은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11줄짜리 성명이 다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거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10월 2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한반

전략핵무기·전술핵무기 개념과 북한의 전술핵무기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전략핵무기/전술핵무기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전략핵무기이고 무엇이 전술핵무기인지 나누는 기준은 단일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위력·사거리·용도에 따라 나눕니다.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 SNW)

전략핵무기는 100kt 이상의 위력이나 장거리가 특징으로, 상대의 전체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여 전쟁의 판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무기입니다. 5,500km를 넘는 사거리로 다른 대륙에 있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치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폭격기 등이 있습니다.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TNW)

전술핵무기는 반대로 위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사거리가 500km 이하로 단거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핵무기는 그 엄청난 위력 때문에 역설적으로 실제 전장에서는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절대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구분되는 전술핵무기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제는 전술핵무기보다도 위력을 줄여 실전 사용의 문턱을 더욱 낮추는 저위력 핵무기라는 개념도 출현했습니다. 전술핵무기나 저위력 핵무기는 현재 운용되는 재래식 무기에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은 최초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지시합니다. 전술핵무기의 개념을 생각하면, 북한이 이를 개발한다는 것은 태평양 건너 미국이 아닌 남한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수십 차례 진행했는데, 전술핵무기 개발이란 바로 이러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핵탄두를 수십 개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또한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검증하는 식으로 이뤄지리라 전망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2022년 5월 “7차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대통령실)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언제 핵실험이 이뤄져도 놀랍지 않을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북한은 ‘전술핵부대 운용훈련’을 통해 대남 핵무기 실전 사용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군사회의에서 지도 위 서울 부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라”는 발언을 공개했고,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한국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한미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응하여 “남반부(남한) 전 영토 점령”과 “해외무력개입파탄”을 목표로 하는 ‘전군지휘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30일 심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대한민국 군사깡패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해 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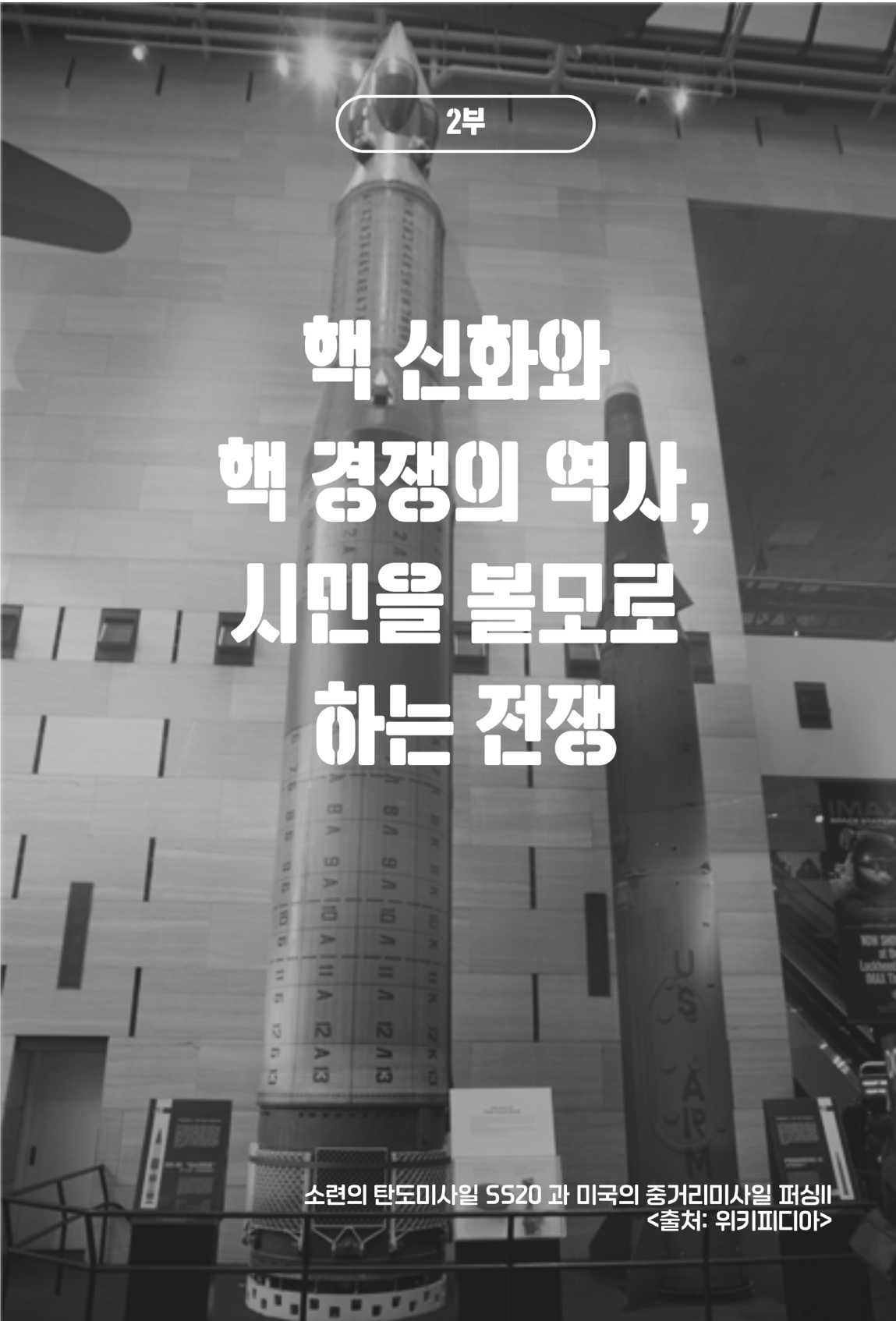
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결의문’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평등파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반대’로 바꾸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자주파

는 유감 표명마저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주과 수정안이 안전으로 확정되자 평등과 중앙위원이 퇴장하여 정족수 미달로 특별결의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중앙위원회는 어떤 입장도 채택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시 《한겨레21》의 기사, “진보는 판문점에서 멈춘다”(2006년 10월 31일)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끝내 반대한다는 성명 하나 내놓지 못한 민주노동당”, “인권이든 핵문제든 북한에 대해선 늘 우물쭈물해왔던 이 땅의 진보에 묻는다”고 표제를 뽑았습니다. 기사는 “민주노동당의 북핵 인식이 대중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중앙위원이 한국의 정치 동향과 민주노동당 내부 성원의 인적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북한에 보낸 ‘일심회 사건’이나, 자주과가 2007년 대선 핵심 슬로건으로 고집한 ‘코리아 연방공화국’과 관련한 논쟁과 뒤이은 대선 패배 국면에서 계속 비슷한 갈등을 겪으며 분열합니다.

2020년대 현재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화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남한 핵무장론도 거세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운동은 만약 외국에서 본다면 기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북핵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9월 북한이 선제핵공격을 법으로 정했을 때 이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단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달인 10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는 북한의 선제핵공격법을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1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핵

을 억지할 방안으로 한미동맹의 강화, 심지어 남한 핵무장론이 점점 힘을 얻는 현 상황에서는, 사회운동이 '핵무기 반대'를 평화운동의 원칙으로 확고히 해야만 그러한 주장을 제어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large SS-20 missile on display in a museum. The missile is the central focus, pointing upwards. It has a conical nose and a cylindrical body with various markings and numbers. The background shows the interior of a museum with a high ceiling and other exhibits. The text is overlaid on the image.

2부

핵 신화와 핵 경쟁의 역사,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전쟁

소련의 탄도미사일 SS20 과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퍼싱II
<출처: 위키피디아>

2부

핵 신화와 핵 경쟁의 역사: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전쟁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 무기를 넘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압도적인 파괴력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수반하며, 도시를 지우고 문명을 붕괴시키는 절멸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절멸의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둔갑했습니다. ‘전쟁 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핵무기의 존재를 정당화해 온 사상적 기반, 즉 ‘핵 억지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 억지론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복의 위협이 충돌을 억제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이론은 냉전기 미국과 소련(오늘날의 러시아)은 물론, 중국과 북한, 이란 등 핵보유국과 핵야망국의 전략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억지론은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비판을 차단하며, 핵군축의 동력을 꺾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군축을 진지하게 논의하려면, 이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자기모순,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정면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2부에서는 핵억지론의 역사적 형성과 변형을 검토할 것입니다. 대량보복전략과 핵기습론에서 출발한 핵전략이 확증파괴론과 제한핵전

쟁론을 거쳐, 어떻게 오늘날의 ‘맞춤형 억제전략’(미국)과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러시아)으로 변모하였는지 그 전략적 진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울러 ‘핵 억지론’ 주장에 맞서 평화운동이 어떻게 핵군축을 끌어냈는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어서 핵억지론이 현실에서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논리 자체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전쟁, 아랍—이스라엘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핵 억지론자들의 주장과 거기에 반영된 해석적 편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 억지론의 ‘장기 평화(Long Peace)’ 주장에 내포된 자기지시적 논리를 분석하고, 오늘날 평화의 실제 조건은 무엇인지 되짚어 볼 것입니다.

1. 상호확증파괴, 냉전 시기 핵 경쟁

(1) 미국의 대량보복전략과 소련의 핵 기습 전략

억지이론의 태동 : 대량보복전략

핵개발 초기, 미국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여겼습니다.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핵 개발을 서둘렀던 것도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핵무기가 교전 상대국의 전쟁능력과 의지를 꺾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군사전략가들은 핵무기 하나가 수천 톤의 네이팜탄과 같은 위력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핵무기야말로 절대무기이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며, 나아가 적대국의 전쟁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무기라고 여겼습니다.

1952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핵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자,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핵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설을 군사전략으로 이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핵 억지 이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량보복전략’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사소한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하고 언제든 대량 보복이 가능하도록 핵전력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인구 2만 5천 명 이상인 소련의 도시마다 2개 이상의 핵폭탄을 할당해 총 520발을 동시에 투하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소련이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량보복전략의 작전계획인 단일통합작전계획(SIOP-62)은 미국의 첫 번째 핵전쟁 계획인데요, 과잉 파괴, 선제 공격이 특징입니다. 시나리오대로 핵 공격을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공산권 국가의 희생자는 2억 7천 5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유사시 3,200개의 핵탄두가 소련, 중국, 폴란드 주요 도시, 군사시설 등 1,06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선제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서 핵: 핵 기습 전략

한편, 소련 역시 1949년에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는데요, 1950년대의 소련은 핵무기를 전쟁 수행 전략의 하나로 접근했습니다. 억지보다는 승리를 핵심 교리로 삼았던 러시아의 군사전략 전통에 따라, 핵

무기 역시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간주하고, ‘전장(戰場)에서 전략적 돌과 구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운영 능력에서 미국에 열세였던 터라, 소련은 먼저 핵 공격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에 따라 핵 기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핵 작전 개시 단계에서 적의 전략 및 전술 목표를 완전히 파괴하고, 적 영토에 전면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이었죠.

물론, 이 전략에 단지 승리를 위한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 제한 역할(damage-limitation role)과 함께, 초강대국으로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되었죠. 소련은 서방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자신의 핵능력은 물론 배치 현황 같은 핵전력의 일부를 부분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961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이라 불리는 ‘차르 봄바’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량보복전략과 소련의 핵기습 전략은 모두, 재래식 공격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비대칭 대응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공격(반격)보다는 1차 공격(선제공격)을 우위에 두는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죠.

핵억지 신뢰성의 위기

하지만 1960년대, 미국의 핵 전략가들은 이와 별개로 대량보복전략이 ‘보복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이 제때 핵 전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핵 보복 능력을 갖추고도 보복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입니다. 적의 소규모 재래식 공격을 핵무기로 보

복하면 국지전에 전면전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막대한 비용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핵 공격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억제되기는커녕, 도리어 핵보유국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시험받는 처지가 되고, 핵 억지력은 쓸모없게 되는 거죠.

또, 대량보복전략은 수천 개의 전략 핵무기를 일거에 쏟아붓는 계획인데, 이런 경직된 작전계획으로는 소련과의 핵전쟁에서 ‘항복이나 재앙이냐’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핵 억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자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을 독점한 상태였음에도 미국의 핵 억지 신뢰성을 깨뜨린 사례로, 핵전략가들은 다음을 꼽습니다. 예를 들어,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 때 프랑스는 미국에 항공폭격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 다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1956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를 소련이 무력 진압했지만 소련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2차 베를린 위기에서도, 미국은 핵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결국 포기합니다.

게다가 대량보복전략은 상대로 하여금 핵무장을 부추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핵 우위를 내세워 무차별적 핵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면, 위협을 당해본 적국이든 이를 지켜본 경쟁국이든 핵무장에 사활을 걸 것입니다. 소련과 중국이 전자의 사례라면 영국과 프랑스가 후자의 사례인 셈이죠.

소련이 1953년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1957년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술을 과시합니다. 대량보복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핵공격으로 소련 사회를 파괴

제1격과 제2격

- 제1격(first strike) : 선제 공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적의 핵전력을 파괴해 핵 공격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제2격(second strike) : 선제 공격 이후 반격에 나서는 것을 제2격이라고 합니다. 제2격 역량의 핵심은 적의 1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무기의 생존능력입니다.

대가치전략과 대군사전략

- 대가치전략(Counter-value Strategy) : 적의 인구밀집지역이나 경제·문화 중심지를 주요 타격목표로 삼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적의 전쟁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 대군사전략(Counter-force Strategy) : 적의 군사시설이나 전략무기를 주요 타격 목표로 삼는 전략을 말합니다. 적의 공격·반격 능력을 제한해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억제 전략

-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 거부적 억제는 방어능력에 좌우되며, 전통적으로 활용된 억제 전략으로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도 포함됩니다. 상대방 핵시설을 선제공격해 무장해제시키거나 미사일 방어체제로 적의 공격을 방어함으로써 공격해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전쟁을 단념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 징벌적 억제(deterrence by retaliation) : 보복적 억제, 응징적 억제라고도 하며, 교전국의 반격능력에 기반을 둡니다. 보복에 따른 피해가 너무 커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라면 적이 애초에 공격을 시도할 생각도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응징적 억제는 공포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이 목표가 됩니다.
-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 통상 핵우산으로 불리며, 핵무

장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국가를 보호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하는 전략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2격(반격) 역량을 갖추기 시작한 소련의 핵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2) 억제 이론의 발전, 유연반응전략

유연반응전략과 제한핵전쟁의 등장

1960년대 미국의 핵 전략은 ‘유연반응전략’과 ‘확증파괴전략’으로 좀더 정교화됩니다. ‘유연반응전략’은 저강도 분쟁부터 전면적 핵전쟁까지, 적의 도발 수준에 맞춰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운용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대량보복전략처럼 핵무기를 모두 쏟아붓는 계획은 실행력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제한적 수준에서 핵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제한핵전쟁’이라고 하는데 제한핵전쟁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면적인 핵전쟁은 말 그대로 재앙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핵을 사용하면

전면적 핵전쟁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죠. 이때 말하는 제한적 수준의 핵이란 군사시설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핵 전략가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대가치전략’이 아니라 ‘대군사전략’이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소련 주요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자제하고, 소련도 대도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면, 제한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당시 펜타곤이 추정하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핵전쟁을 하면 사상자가 1억 명에서 1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략적 모호함과 군비경쟁의 위험

1억이 사망하는 전쟁은 엄두를 못 내지만 1천만이 사망하는 전쟁은 할 수 있다는 가정이 기가 막힙니다만,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유연반응 전략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전략이라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위기를 고조시켜야 적의 도발을 단념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려면 핵 전략에서 일정한 모호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함은,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견잡을 수 없는 핵확전의 위험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유연반응전략은 필연적으로 군비경쟁을 가속합니다. 재래식 전쟁에서도, 제한 핵전쟁에서도, 전면적 핵전쟁에서도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려면, 최신 과학기술은 물론 정보력까지 총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연반응전략은 다른 전략에 비해 더 많은 핵을 필요로 합니다. 케네디 행정부 시절,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소련 사회를 완전히 파

괴하려면 ICBM 1,000개면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증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군 지도부는 소련의 주요 군사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2,300개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인구밀집지역을 겨냥하는 ‘대가치전략’보다 군사시설을 목표로 하는 ‘대군사전략’에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선제 핵공격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운영해야 하고, 핵잠수함 등 성능이 뛰어난 투발수단도 확보해야 합니다. 게다가 유연반응전략은 재래식 전력에서도 우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연반응전략—제한핵전쟁론에서 군비경쟁은 필연적으로 무한정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공포의 균형 : 상호확증파괴

확증파괴전략: 새로운 핵억지의 기준

여기서 미국의 핵전략가들은 ‘전면적인 핵전쟁은 서로 피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가정에 다시 주목합니다. 만일 ‘소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 보복 능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이 사실을 소련이 인지한다면, 소련이 미국 본토를 상대로 핵전쟁을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설령 유럽에서 제한적인 핵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전면 핵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기 고조를 제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미국이 소련의 선제공격에도 살아남아 반격할 수 있는 2격 능력을 보유하면, 그 이상의 핵무기는 필요없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됩니다. 이 전략이 바로 ‘확증파괴전

핵 투발 수단 (핵3축 체계, 핵 운반체)

· 핵무기를 원하는 목표물에 운반할 수단이 없으면 핵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어떤 투발 수단이 제1공격(선제공격)과 제2공격(보복공격)에 적합한지, 거부적 억제와 징벌적 억제를 위해서는 핵 투발수단을 어떻게 배치·운영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핵 투발수단의 구성과 운영은 핵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전략폭격기

· 핵무기를 투발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략폭격기는 주요 핵보유국의 핵전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략폭격기는 다른 투발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제작이 쉬우며, 미사일과 달리 운용의 융통성도 커서 중간에 철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공망과 대공무기에 취약하고, 체공 시간이 길어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 탄도미사일은 탄두를 탑재한 채 포물선형 비행궤도를 따라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말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대양을 넘어 적대국의 전략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로, 사거리 5,500km 이상을 요합니다. 이 정도 비행거리에는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우주 로켓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기술과 ICBM기술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 ICBM은 발사 후 요격이 어려워 공격의 신뢰도가 높고, 지하 격납고(silo)나 이동식 발사대와 함께 보관되면 은폐·엄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한번 발사되면 철회가 불가능하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는 선제 공격에 취약합니다. 무엇보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고난이도 기술로 소수의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입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비행방식과 추진력은 ICBM과 같지만,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SLBM은 오늘날 전략적 중요성이 가장 높은 핵 투발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잠수함은 대양 어디든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에도 가장 생존력이 높은 투발 수단입니다. 또 잠수함은 다량의 미사일과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씩 잠항할 수도 있어 강력한 기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SLBM은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만큼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잠수함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핵 투발 수단입니다.

전략자산 (Strategic Assets)

·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을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이지스함,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핵심 무기체계도 포함됩니다.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가 확장 억제 수단에 포함된 것은 이들 무기가 핵무기와 유사한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략'입니다.

이 전략을 구체화한 케네디 정부의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소련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수 없는 수준의 손상'을 인구의 1/4 ~ 1/5이 사망하고 산

업 능력의 1/2 ~ 2/3이 파괴되는 수준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400기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소련의 선제공격에도 이 정도의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최소 1,000개의 ICBM이 분산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확증파괴전략은 인구밀집지역이 최우선 공격 목표라는 점에서 대가치 전략입니다. 동시에 이 전략은 선제공격(1격)보다는 반격(2격)능력에 좌우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핵전쟁에서 위력적인 반격이 가능하려면, 고성능의 위협적인 핵투발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의 방어를 뚫고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어야 하며, 평시에는 은폐되고 분산되어 1차 공격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기습 발사도 가능해야 합니다. 군사전략가들은 이것이 가능한 핵투발수단으로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꼽습니다. 미국은 이를 핵 3축 체계,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ICBM은 소련의 R-7이었습니다. 1957년 첫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전략폭격기 전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ICBM개발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같은 해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도 발사하죠. 미국도 ICBM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1958년 SM-65 아틀라스 발사에 성공하고, 1960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성공합니다. 이어서 1968년에는 다탄두각개목표돌입체(MIRV)를 개발하고, 1970년에는 고체연료 기반의 ICBM까지 실전 배치하면서 2세대 ICBM을 주도하죠.

상호확증파괴: 핵억지의 균형과 역설

확증파괴는 애초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소련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전략을 채택합니다. 즉, 핵무기를 1차 공격 수단이 아닌 보복 수단으로 간주하고,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보복 수단으로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련 역시 반격 능력(2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브레즈네프시기 소련은 매년 200기의 ICBM을 생산했으며, 1963년에는 수중발사가 가능한 SLBM을 개발하고, 1967년에는 1,000해리를 잠수해서 이동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도 보유합니다. 그 결과 소련도 마침내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 확증파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허드슨 연구소의 핵 전략가 돈 브레넨입니다. 당시 미국의 군 지도부는 소련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핵을 보유하면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된다고 수만 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했는데요, 브레넨은 이를 'MAD', 즉 미친 짓이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핵무장은 억제하는 군비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죠.

상호확증파괴와 군비통제: 핵 균형의 딜레마

군비통제론자들은 대도시와 산업시설에 대한 확실한 보복 능력을 갖추고, 상호 취약성이 유지되어야 핵 균형이 형성되며, 그래야만 핵 억

지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소련 모두 핵 공격, 특히 보복 공격에 취약한 상태여야 전략적 안정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포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호확증파괴 상태에서의 핵억지론입니다.

역설적으로, 군비통제론자들은 예방적 공격으로 적의 핵 전력을 무력화하고 방어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방어체계를 구축한 국가를 상대로 확증파괴를 실현하려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게 되고,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한 나라는 언제든 선제 핵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핵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불안정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당시 기술력으로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현이 어렵고,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도 부정적 평가의 근거였습니다.

1972년 5월, 미국과 소련이 탄도미사일방어체계제한협정(ABM,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이 체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미사일 방어를 포기함으로써 상호확증파괴를 보장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ABM 협정에 따라 미국은 미니트맨-Ⅲ 격납고 주변, 소련은 수도 모스크바 인근에만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합니다.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ICBM과 SLBM 전략무기도 제한합니다. 미국은 ICBM 1,054기와 SLBM 656기, 소련은 1,618대와 950대로 동결합니다. 표현은 동결인데 이 역시 실제로는 상대방이 보복할 수 있는 적정 핵무기를 보장함으로써 — 즉 취약성을 유지함으로써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군비통제 협정이라 할 수 있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입니다.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전쟁: 핵 억지론

제한핵전쟁 전략이나 상호확증파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둘 다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전략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제한핵전쟁은 적대국 시민을 인질로 잡는 전략이라면, 상호확증파괴 억지전략은 자국 시민을 볼모로 내주는 전략입니다. 요컨대 “서로 가장 큰 손해는 남겨두자”는 기괴한 발상에 기반한 것이죠.

충분한 보복 능력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미친 짓(MAD)’이지만, 상호확증파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미친 짓(MAD)’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상호확증파괴를 유지하려는 핵 억지전략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어떤 시민이, 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핵 억지 전략이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안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치적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4) 승리하는 핵전쟁을 위하여 : 제한 핵옵션

확증파괴전략의 신뢰성 위기와 지속가능성 논란

하지만 확증파괴전략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아 신뢰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미국이 소련의 인구밀집지역으로 보복 공격을 하면 소련 역시 핵무기로 반격할 텐데, 이러면 공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어느 대

통령이 보복을 감행할 수 있겠는가?’ 즉 대도시를 향한 반격(2격)은 상호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저하게 되고, 실행 불가능한 작전은 곧 보복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입니다.

또 상호확증파괴 상태, 즉 핵 균형에 도달해도 이것이 지속가능하나 의 의문도 제기됩니다. 상호확증파괴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억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의 실패는 곧 핵전쟁을 의미하는데 이때 자국 시민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명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전역(戰域, 전쟁지역) 차원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이 전면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같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죠.

보복의 신뢰성에서 선택적 억지로 : 제한 핵옵션

결국 1974년 1월, 닉슨 2기 행정부의 술레진저 국방장관은 유연반응 전략과 제한핵전쟁론을 소환합니다. ‘제한 핵옵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술핵무기부터 전략핵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 두고, 위협 수준에 맞는 억제 수단과 보복 방안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의도적으로 보류함으로써, 적대국이 무차별적인 핵공격이나 전면적인 핵보복에 나서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억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

·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s)는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고위력의 핵탄두를 말합니다. 전략적 목적은 핵심 산업시설, 전력·교통·인프라 등 적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파괴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전략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크고 무거워서,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이용해 투발합니다. 냉전 시기 전략핵무기는 미국과 소련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춘 무기로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는 저위력 핵무기라고도 하며 소련(러시아)에서는 비전략 핵무기라고도 합니다. 주로 전장(戰場)에서 아군의 전투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 표적을 타격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0kt(킬로톤) 미만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의미하며, 전투기, 단거리 미사일, 곡사포, 지뢰, 배낭으로 운반합니다. 참고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는 13kt, 21kt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전역핵무기(Theater Nuclear Weapons)는 전장에서 군사작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핵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술핵무기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500 ~ 5,5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중거리 핵무기도 포함됩니다.

군축과 군비통제

· 군축(軍縮, disarmament)은 현재 보유 중인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 체계를 감축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축은 종종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 군비통제(軍備統制, arms control)는 군사력 전체 또는 특정 무기 체계를 동결(freeze), 제한(limitation), 금지(ban), 축소(reduction)함으로써 군사적 대결 상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비통제는 무기의 감축보다는 군사적 위험(risk)의 관리 및 억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비핵화나 군축과는 구별됩니다.

있게 되죠. 술레진저 장관은 탄두의 정밀도 및 핵 통제 기술의 발달을 근거로, 과거와 달리 특정 군사시설만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전략 변화에 따라 1976년에는 핵전쟁을 위한 개정된 ‘단일통합 작전계획’ SIOP-5를 마련하고, 1980년에는 카터 대통령이 ‘핵무기 운영에 관한 대통령 지침’(PD-59)을 승인합니다. 유연반응전략과 제한핵전쟁론이 군사 작전계획과 대통령 지침에 공식 반영된 거죠. SIOP-5에는 엄선된 공격 선택지들이 포함되었고, PD-5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우선 공격 목표는 대도시·산업지대가 아니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군사시설 등 정치·군사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 위기 고조 및 제한 핵전쟁 국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련의 2격(반격)에 대비해 3격으로 대도시 공격을 할 수 있는 보복능력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핵 선제 공격도 불사하며, 강력한 방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증과피전략과 비교해보면, 제한핵전쟁론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핵전쟁을 전제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핵전략은 ‘유연하면서도 제한적인 선택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전면적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회피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제한핵전쟁론의 공간적 편향: 동맹국의 핵전역(戰域)화

유연반응전략—제한핵전쟁론이 유럽과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전략에 적용될 경우, 새로운 쟁점이 추가됩니다. 핵 억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두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해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략핵무기와 전역(戰域)핵무기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전략핵무기는 미국 본토와 소련 본토를 겨냥한 무기지만, 전역·전술핵무기는 유럽이나 중동, 동아시아와 같은 전역(戰域, 전쟁지역)에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전략핵과 전역핵, 전술핵 구별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유럽을 폐허로 만들거든요. 이런 사정은 동아시아나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제한된 핵전쟁을 강조함으로써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전은 피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하지만, 유럽, 특히 서독의 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확전 위협 신호를 보내야 유럽에서 소련과의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략핵무기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어 확장억제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사 전략가들은 종종 핵군축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는

데,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제한핵전쟁론은 대량보복전략이나 확증파괴전략과 달리,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에 명확히 기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정이 미국 본토에서 벌어질 핵전쟁이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날 핵전쟁을 상정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3차 대전이라도 벌어지면, 유럽은 전쟁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전역(戰域, 전쟁지역)에서 핵전쟁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바로 제한핵전쟁론입니다. 유럽인들에게 이는 재앙입니다. 제한핵전쟁과 유럽에서의 핵전쟁은 사실상 같은 말이고, 이는 동아시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제2핵시대, 핵확산과 핵무기 현대화

(1) 1980년대 핵위기와 반핵평화운동

NATO의 핵무장과 1980년대 핵위기

1970년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이 상징하는 미소 간 데탕트(긴장 완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미국은 제3세계에서의 인권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면서 데탕트의 균형을 흔들었거든요. 그러다 1970년대말부

터 시작된 소련의 중거리핵미사일 현대화와 NATO의 핵 재무장, 그리고 1981년 취임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신냉전—전략방위구상(SDI)으로 핵 위기가 고조됩니다.

NATO가 1970년대 말 핵 재무장을 선택한 배경에는 미소 간의 전략 무기제한협정(SALT)의 한계에 대한 유럽 측의 불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2차 협정(SALT II)에서는 1차 협정(SALT I)보다 제한대상에 다탄두 미사일(MIRV)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전략폭격기도 포함시키긴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협정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전략무기’였거든요. 유럽에 배치된 중거리 핵미사일 같은 ‘전역(戰域)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소련은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며 중거리 핵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있었고, 유럽 국가들, 특히 서독은 미·소 양자 간의 전략무기 제한만으로는 유럽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군사적 우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유럽의 안보도 위태로워질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독과 영국 등 유럽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NATO의 핵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수용한 미국은,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퍼싱-II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그리폰 지상발사 순항미사일(GLCM: Ground-Based Cruise Missile)을 유럽에 배치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럽 시민사회의 반응과 유럽 핵군축운동

그러나 유럽 시민들은 NATO의 핵무장을 미국과는 전혀 다른 시각

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전쟁 억지가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 준비 신호로 보았던 거죠.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은 미국 본토가 아닌 유럽을 겨냥하고 있었고, 미국이 말하는 제한핵전쟁이란 전략 자체가 유럽 전역(戰域)에서의 핵전쟁을 가정하는 계획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핵 전쟁의 위협은 유럽에 한정된다’는 미국 고위관리의 발언은 엄청난 과장을 야기했습니다.

퍼싱-Ⅱ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서독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 배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자국에 핵무기가 설치되는 것에 반대했고, 그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핵무기 반대 운동이 전개됩니다. 바로 유럽핵군축운동(END: European Nuclear Disarmament)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부를 참고하세요.)

또 유럽의 지식인과 반핵평화 활동가들은 제한핵전쟁론에 내포된 핵전쟁 위험성과 정치적 무책임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되면 ‘유럽은 스스로 통제하지도 못하는 핵무기의 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 미·소 두 초강대국의 분쟁에 휘말린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요.

NATO는 중거리 핵미사일 제한 협상을 추진하되, 1983년까지 성과가 없을 경우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같은 ‘이중결정’에 대해서도 지식인들과 반핵평화 활동가들은 ‘협상보다는 군비증강이 우선’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협상은 반핵 여론을 잠재우고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전 지구적 반핵평화운동의 고양

이듬해인 1981년, 유럽에서 반핵평화운동이 크게 고양됩니다. 1982년에는 제2차 UN군축특별총회를 계기로 반핵평화운동이 미국과 일본 등 전지구적으로 확산됩니다. 유럽의 핵군축운동은 미국의 핵 동결(Nuclear Freeze) 운동과 세계 각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핵지대화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의 시민들은 1983년을 「반핵의 해」로 규정하였고 노동조합도 평화운동에 동참하면서, 유럽 주요 도시와 미군기지 앞에서 시위 참가자 수는 급속히 증가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3부를 참고하세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반핵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983년 10월 모스크바에서는 80만 명이 반핵평화대행진에 참여했고, 1984년 11월에는 체코와 동독 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소련의 신형 핵미사일 배치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폴란드에서는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가상 핵전쟁을 다룬 영화 『The Day After』가 국영 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신형 핵미사일 배치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NATO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반핵 여론을 무시한 채 1983년 11월, 미국의 퍼싱-II 미사일과 그리폰 순항미사일 배치를 강행합니다. 서독에는 퍼싱-II 미사일 108기가 배치되었고, 서독,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5개국에는 464기의 그리폰 순항미사일이 배치됩니다.

(2) 핵군축과 탈냉전

반핵평화운동의 영향과 핵군축 논의의 본격화

1980년대 전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핵평화운동은 이후 진행된 미소 간 군축 회담과 탈냉전 분위기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986년 1월,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2000년까지 완전히 폐기하자며 미국에 전면 군축안을 제안합니다. 한 달 뒤 미국 레이건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중거리 핵무기 감축 협상이 본격화됩니다.

소련이 이처럼 핵감축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더 이상 군비경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기술에서도 미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던 데다, 1979년부터 이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 GDP의 15%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 소련 경제의 낮은 생산성,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출 감소로 취약한 소련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소련으로서는 군사비 감축이 절실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누적되어 미국 역시 군비 축소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반핵평화운동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고르바초프는 핵군축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반핵평화운동의 요구에 공감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그는 핵 경쟁이 아닌 ‘안보 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를 함께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레이건 역시 1984년 대선을 거치면서, ‘핵 전쟁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재선 승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상호확증파괴(MAD) 억지전략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깊은 회의와 윤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죠.

본격화되는 핵 군축 : INF 조약과 START 체결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소련은 핵무기 감축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미국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서 전략방위(SDI) 구상이 사실상 무용해졌고, 1987년 2월에는 고르바초프가 평화운동가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조언을 받아들여 핵군축과 SDI를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군축협상이 마지막 관문을 넘게 됩니다. 마침내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역사상 첫 군축 협약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 체결됩니다.

INF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사거리 500 ~ 5,500km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모두 폐기하고, 중·단거리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 발사 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니다. 또 조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 현장검증 제도도 도입합니다. 그 결과, 1991년 6월 1일까지 모두 2,692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합니다.

INF 조약으로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하면서, 미·소 양국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을 재개합니다. 이 협상은 기존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과 달리 ‘경쟁의 제한’이 아니라 ‘실질적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철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PNI(대통령 핵구상)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PNI 선언 직후인 1991년 11월 18일,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어 12월 18일에는 '한반도 핵부재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남북이 채택하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던 시점은 1958년 1월입니다. 첨단 재래식 무기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주한미군 및 한국군을 현대화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반핵 여론이 거셌던 만큼,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은 전략(SIOP) 및 전역(戰域) 임무를 모두 수행할 목적이었으며, 특히 군산에 배치된 전술핵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비축량은 1967년 950기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었고 1991년 전량 철수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핵군축 흐름 속에서 한반도 역시 잠시 핵무기 없는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인 감축'이 목표였습니다. 또 SALT가 운반수단만 제한했던 것과 달리 START는 핵탄두도 감축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1991년 7월 31일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미소 간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I)에 서명합니다. 여기서 두 정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폭격기 등 운반수단을 1,600개 이하로, 전략 핵탄두는 6,000개 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와 함께 조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상호 현장 사찰과 위성 감시 활동도 허용합니다.

냉전 종식과 전술핵무기 폐기: 대통령 핵구상(PNI)

1991년,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더 과감하게 ‘핵 군축’에 나섰습니다.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이를 경제, 복지, 환경 등 평화로운 목적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평화 배당금’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군축 대상은 전술핵무기였습니다. 전술핵무기는 상대적으로 사용가능성이 높은 핵무기인데다, 냉전 종식과 함께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역시 같은 처지였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소련에 이어 핵지휘 통제력을 승계하려면 핵무기 폐기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전술핵무기가 “러시아 핵전력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는 것”이라고 해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신독립국가(NIS)들이 수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1991년 9월 27일,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유럽에 배치된 1,000기의 핵탄두와 700기의 지상발사 전술핵무기, 보관 중이던 400개의 핵탄두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또 해군이 운용하던 전술핵무기 절반을 폐기하고 나머지는 저장 상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죠. 다음 날인 9월 28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이에 호응해, 핵포탄과 단거리 미사일 핵탄두, 핵지뢰를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대통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핵 군축·군비통제 조약 비교

조약 선언	서명 (발효)	주요 협상· 선언 내용	특징
SALT I	1972 (1972)	전략 탄도미사일 발사대 동결, ABM 제한	- 군비통제, 전략무기 제한 및 동결, - 무기한, 2002년 미국 ABM 조약 탈퇴
SALT II	1979 (미발효)	전략 운반체 제한, MIRV 제한	- MIRV 제한 시도, 미발효
INF	1987 (1987)	500~5,500km 지상발사 미사일 전량 폐기	- 첫 번째 핵 군축, 운반체 폐기, 강력한 검증 - 무기한, 2019년 미국 INF 조약 탈퇴
START I	1991 (1994)	운반체 1,600기, 전략핵탄두 6,000기 제한	- 운반체 폐기, 강력한 검증, - 전략핵무기 80% 감축, 2009년 만료
PNIs	1991~92	전술핵 감축 및 폐기	- 핵탄두 폐기 공식화, 일방적 선언, - 검증절차 없음, - 전술핵무기 75~85%, 감축 추정
START II	1993 (미발효)	전략핵탄두 3,000~3,500기 제한, MIRV 금지	- MIRV 금지, 미발효
SORT	2002 (2003)	배치 전략핵탄두 1,700~2,200기 제한	- 핵탄두 해체 의무 없음, - 약한 검증, 2012년 만료
New START	2010 (2011)	배치 전략핵탄두 1,550기, 배 치 운반체 700기, 예비 운반체 100기 제한	- 핵탄두 해체 의무 없음, 강력한 검증, - 2021년 만료, 2026년까지 연장, - 2023년 러시아 참여 중단 선언

령의 일방적 핵군축 구상(PNI,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이라 불리는 이 조치로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중 상당수가 철수하고 폐기됩니다.

참고로, 핵 탄두의 해체와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것은 PNI가 처음입니다. INF조약과 START-I 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을 감축하고, 여기에 탑재된 탄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탄두의 폐기를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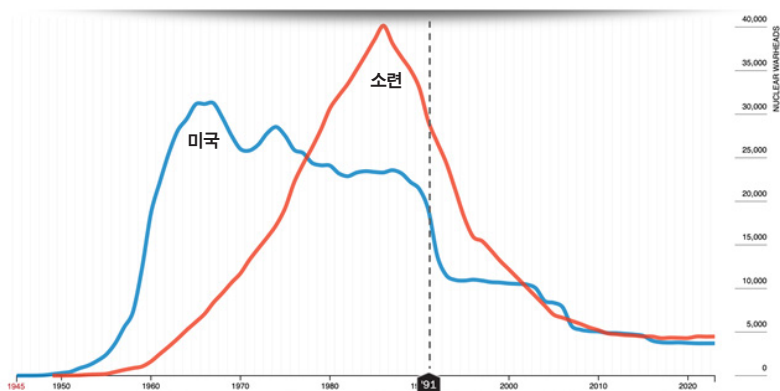


그림 1 START 협정 전후 미국과 소련(러시아) 핵탄두 보유량 변화 <출처: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Nuclear notebook: Nuclear Arsenals of the World,"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운반체에서 분리된 핵탄두를 별도로 보관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안전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수가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군축의 시대(1980~90년대)와 반핵평화운동

<그림1>을 보면, 1991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소련(러시아) 핵탄두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 군축의 결과입니다. 1987년 미·소가 중거리 핵무기 감축(INF)에 합의하면서 핵군축이 시작되었고, 1990년 독일 통일과 1991년 소련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양국 간 핵군축 협상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1994년 발효된 START I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전략핵무기 80%가 해체되었습니다. 1991~1992년 미국과 러시아의 PNIs 선언에 따라 전술핵의 76~83%가 해체되었고요. 단언컨대, 1980~90년대는 핵군축의 시대라 불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핵 군축의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발히 전개된 반핵평화운동이었습니다.

(3) 핵 확산과 핵도미노의 위협 : 제2 핵시대

제2핵시대 : 핵무장 동기의 변화

1998년 5월, 인도는 포크란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능력을 과시하고,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파키스탄도 같은 해 5월, 차가이에서 핵실험을 단행하여 자신도 핵보유국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함-3 시험발사에 성공하며,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8월에는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까지 도달하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란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핵질서의 다극화와 미사일 확산을 예고한 사건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를 핵 전략가들은 제2핵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던 냉전 때와 달리 더 많은 핵 보유국, 핵 야망국이 행위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외에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북한, 이란, 남아공, 리비아 등이 핵 보유국을 자처하거나 핵 야망국임을 숨기지 않았던 거죠.

무엇보다도 제2핵시대는 핵무장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냉전시기 핵 경쟁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가 경제성장과 정치 이념의 우열을 두고 벌이는 ‘체제 경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2핵시대는 이념이나 체제경쟁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열망, 국가적 위신, 종교갈등과 지역갈등, 정권의 생존과 안위가 핵무장의 이유로 부각됩니다.

제2핵시대의 구조와 특징

그러다 보니 제2핵시대는 여러모로 냉전시대 핵경쟁과 다른 양상을 띄게 됩니다. 첫째, 핵 전략가들이 추구하는 ‘핵 균형’과 ‘군비 통제’가 훨씬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핵보유량을 늘리고 핵투발수단을 첨단화하면서, ‘핵 균형’을 위한 협상은 미국과 소련(러시아) 양자 협상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각기 다른 동기와 전략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등장하고, 독립적인 핵 결정 국가가 다양한 차원으로 관여함에 따라 위기관리 방식 역시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했고요. 핵 전략가들 입장에서 보면, ‘유연한 위협 관리’가 소련(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로 한정된 문제에서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에서 지역별·계층별로 서로 다른 위협과 위협으로 확대된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둘째, 전쟁 당사국 혹은 전쟁 위협국의 핵경쟁이 제2핵시대의 특징입니다. 냉전시대 핵경쟁은 열전(熱戰)보다는 ‘체제 경쟁’이 배경인 반면, 중동과 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의 핵경쟁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지역 분쟁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을 축으로 하는 중동전쟁, 인도

와 파키스탄을 축으로 하는 국경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 북한과 남한의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갈등이 핵경쟁의 배경입니다. 분쟁지역에서 핵경쟁을 하는 만큼, 잦은 마찰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커진 거죠.

셋째, 제2핵시대에서는 핵무기 자체가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가 핵무장의 정치적 추동력인데다, 핵무력만이 정권의 안위와 민족과 국가의 안녕을 지킬 수 있는 유일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제2핵시대 핵보유국이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의 우위보다는 ‘핵 주권’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로 간주하면서 ‘세계 최초의 이슬람 핵보유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9월 헌법 개정으로 핵무력을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수단의 반열에 놓았습니다. 이란은 핵을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상징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중동의 지역 강국’,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 거듭나려 합니다.

넷째, 제2핵시대에는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신흥 핵보유국들은 대체로 2차 타격능력(보복 능력)이 매우 불완전하고 취약합니다.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제공격이나 조기 핵사용의 유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핵경쟁에서 열세였던 시기 소련의 핵전략은 핵기습공격론이었는데,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서 재래식 전력마저 취약하고, 군사력이 핵무

기에 집중된 체제라면 핵 선제사용의 유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흥 핵보유국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타격능력이 취약한 만큼 핵 전력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핵무기에 대한 민간 정부의 최소한의 통제조차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핵무기가 권위주의 정권의 안위와 생존과 연계되어 있고, 여기에 격화된 민족주의까지 결합될 경우,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으며,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2핵시대와 핵군축의 후퇴

다섯째, 제2핵시대는 핵군축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줄어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핵경쟁은 오히려 확대되고 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핵시대는 1980~90년대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핵군축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1970년에 발효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무색케하는 것입니다.

5개국에게만 핵무기 보유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NPT는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핵무기 경쟁을 중지하고 핵군축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하자는 공동 목표를 담은 협약이기도 합니다. NPT가 규정하는 핵 확산 금지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의미의 ‘수평적 확산의 금지’, 다른 하나는 핵무기의 성능과 질적 향상을 제한하려는 ‘수직적 확산의 금지’입니다.

스웨덴,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은 핵 무장 능력을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소극적 안전보장(NSA)은 핵보유국(NWS)이 핵비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참고로 적극적 안전보장(PSA, Positive Security Assurances)은 핵비보유국(NNWS)이 핵 공격이나 위협을 받아 피해를 보면 핵보유국(NWS)이 즉각적인 원조와 보복공격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핵우산 약속이기도 하죠.

핵비보유국(NNWS)들은 NPT 협상 초기부터 NSA의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구속력 있고 무조건적인 NSA가 NPT의 모든 핵비보유국(NWS)에 적용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핵보유국들은 군사 대응 옵션의 제한과 확장 억제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구실로 법제화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회의를 앞두고, 핵보유국(NWS)은 핵비보유국(NNWS)에 대해 ‘조율된 불사용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건부 NSA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당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핵비보유국(NNWS)이 미국을 공격하고, 그 국가가 핵보유국(NWS)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면, 미국은 해당 핵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NPT에 가입했습니다. 핵보유국(NWS, Nuclear Weapons States)에게 핵 군축을 촉구하는 것이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는 다수의 핵비보유국(NNWS, Non-Nuclear Weapons States)과 연합하여, NPT 평가회의 때마다 핵확산 방지는 물론,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분

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비핵지대 확대, 원자력 협정 증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은 이러한 핵비보유국(NNWS)의 핵군축 연합에서 이탈해 독자적인 핵무장을 선택했습니다. ‘핵 주권’을 내세운 이들의 핵개발은 그 자체로 핵 확산의 구체적 실현이었고, 기존 핵보유국(NWS)들이 핵무기를 개량하고 핵군축을 거부하는 구실을 제공할 따름이었죠. 핵 경쟁과 지역 내 핵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4) 점점 낮아지는 핵 사용 문턱,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escalate to de-escalate)’

러시아의 핵무기 의존 심화

1990년대 초반 핵 군축 노력도 잠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핵무기 의존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재래식 군사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의 영향권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도 지키고, 국경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체첸 전쟁(1차 체첸 전쟁, 1994~1996년)을 겪으며 러시아 군대의 구조적 취약성과 작전 한계를 확인한 뒤로,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지역 분쟁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NATO의 확장은 러시아의 위협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1999년 NATO의 코소보 공

핵 선제 불사용(NFU, No First Use)

핵 선제 불사용(NFU)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원칙은 핵비보유국뿐만 아니라 다른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약속입니다. 소극적 안전보장(NSA)이 핵비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비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핵 선제 불사용(NFU)은 핵전쟁을 억제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금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핵 선제 불사용(NFU)을 무조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인도 역시 NFU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화학·생물학 공격에는 예외를 두는 조건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모두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거나 이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NFU 선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1982년 브레즈네프 서기장 시절에 NFU를 공식 선언한 바 있으나, 소련 해체 이후인 1993년 러시아 열친 대통령 시기에 이를 철회하고 핵 선제 공격을 사실상 공식화 했습니다.

습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죠. 그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 약화는 극동,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국경 수비대와 상비군 부족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 남부 전선에서 체첸 무장 세력(2차 체첸 전쟁, 1999~2009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억제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국경지대의 정치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필요했고, 이는 전술핵무기(TNW)를 비롯한 러시아의 핵전력을 보존하려는 요인으로 작동했습니다.

1993년 엘친 행정부는 「러시아 연방 군사독트린」을 채택하여, 1982년부터 유지해오던 ‘핵 선제 불사용 원칙(NFU, No First Use)’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핵보유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핵비보유국이 러시아 침략을 주도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핵무기의 위기관리수단화: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

1997년 「러시아 연방의 국가안보개념」에서, 러시아는 “무력 공격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러시아 연방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과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핵태세 수정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을 계기로, 당시 러시아 안보회의 사무총장이었던 푸틴은 ‘코소보 스타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핵교리 개정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에서 핵무기의 새 임무를 가정한 합동군사훈련 ‘자파드-99’를 실시하죠. NATO가 이곳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는 유럽 내 군사 목표물과 미국 내 비공개 목표물을 겨냥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가정한 훈련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핵무기의 새로운 임무를 확인합니다. 러시아 전략로켓군 사령관 블라디미르 야코블레프는 이 새로운 임무를 ‘확장된 억제(expanded deterrence)’, 제한된 충돌을 ‘위기 완화(de-escalation)’하는 도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핵무기를 사용해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겠다는 구상으로, ‘비대칭 대응 전략’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국가 미사일 방어(NMD) 체제 배치를 발표하고 탄도미사일방어체계제한협정(ABM Treaty) 개정도 추진하

유일 목적(SP, Sole Purpose, 단일 목적)

핵무기의 목적은 “오로지 상대방의 핵 공격을 억제하거나 보복하는데 있다”는 취지로, 핵무기를 재래식 공격, 생화학·생물학 무기 등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핵공격 억제 및 보복만을 위해 보유한다는 선언입니다.

핵 사용 기준이나 방침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통한 억제를 추구하는 ‘계산된 모호성(Calculated Ambiguity)’과 달리, 유일 목적은 신뢰 기반의 억제를 추구합니다. 핵 선제 불사용(NFU)은 유일 목적(Sole Purpose)보다 핵전쟁의 구조적, 우발적 위험을 낮추는 원칙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 핵무기의 기본적 역할(fundamental role)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핵공격 억제이다”라고 함으로써 유일 목적에 가까운 선언을 하였지만, 유일 목적(Sole Purpose)으로까지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겠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이를 핵 억제력 즉, 핵심 억제(core deterrence)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내놓습니다. 이는 소련 시절 핵무기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신형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러시아 핵무기의 새로운 역할은 2000년 1월에 발표된 국가안보개념과 4월에 발표된 군사독트린에서 공식화됩니다. “러시아 연방은 러시아나 동맹을 상대로 핵 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이 있거나 대규모의 재래식 공격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핵 선제

공격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2000년 4월 군사독트린에서 러시아는 전면전(global war)은 물론, 지역전쟁(regional war)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무장 분쟁(armed conflict)이 지역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며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컨대 체첸 내 ‘반테러 작전’에 대한 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핵무기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러시아가 부여한 핵무기의 새로운 임무를 미국의 핵 전략가들은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escalate to de-escalate)’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긴장을 고조시켜 긴장을 완화한다”는 뜻으로, 다소 모순적이지만 새 전략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반복적인 핵 위협 발언, 핵무기 투발체계의 시현과 같은 군사훈련을 통해 러시아의 핵 능력과 사용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핵 위협 또는 실제 제한적인 핵 사용을 통해 상대방이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에서 전투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협이 일상화: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의 제도화와 실행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 직후 발표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크림 공화국 병합’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굴욕을 끝내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일방적인 양보나 굴욕적인 국제 질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존중받아야 하며, 자국 안보와 전략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합니다.

2015년 러시아의 국가안보전략은 이를 반영하여,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와 강대국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국방 목표를 사회경제 발전과 연계하며 군사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구 소련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북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서방의 군사활동을 강력히 견제하면서 초정밀 무기와 특수장비 개발, 동원 체계 정비, 군사조직 강화 등 실질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강조하죠.

2020년 「러시아 연방의 핵 억제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 원칙」(핵 억제 기본원칙)은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둘째, 러시아와 동맹에 대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된 경우, 셋째, 러시아의 핵 지휘·통제·통신 인프라가 공격을 받은 경우, 넷째,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이 가해진 경우입니다.

또한 「핵 억제 기본원칙」에서는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핵 억지력의 역할’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조 4항은 “본 기본원칙은 러시아 연방의 군사 지휘기관에 군사행동의 확전을 방지하고, 러시아 및 그 동맹국에 수용 가능한 조건에서 분쟁을 종료하기 위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에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escalate to de-escalate)’라는 전략적 목적이 부여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을 막기 위해 노골적으로 핵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의 핵무기 관련 발언만 200건이 넘었고,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2024

년 6월에는 벨라루스와 전술핵 합동훈련을 실시하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을 실행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25일, 푸틴은 아예 「핵 억제 기본 원칙」 개정을 지시했고, 두 달 뒤인 11월 19일 개정된 핵 독트린에 서명했습니다. 공개롭게도 이날은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컴스(ATACMS) 미사일이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핵 독트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새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입니다. 둘째, 핵무기 사용 조건에 포함되는 적대국의 공격 수단이 확대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전략 및 전술핵무기, 순항미사일, 무인기, 항공기 무기, 그리고 정밀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현대적 전력 투사 수단을 핵 대응의 조건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셋째, “러시아 연방은 (벨라루스 등 동맹국 포함) 핵 공격뿐 아니라 주권과 영토 보전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며 벨라루스를 특정했습니다. 이는 벨라루스와의 군사동맹을 과시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지속 및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로서는 핵 독트린 개정 행위 자체가 곧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의 실행이었던 것이죠.

‘제한적 핵사용’의 제도화: 러시아 핵전략의 위험한 진화

핵무기의 새로운 임무가 실제로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 서방국가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당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핵 태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미국의 경제 수준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한 고위관리는 ‘말만 요란한 위협’이라고 일축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서방의 반응과 별개로 러시아의 핵무기 의존도는 높아지고, 동시에 핵 사용 문턱도 지속적으로 낮아졌는 점은 명백합니다. ‘핵 선제 불사용 원칙(NFU)’을 폐기하면서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도 핵 사용 가능성을 명시했고, 그 조건과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전술핵무기의 역할도 확대했는데, 미사일과 항공기 등 전술핵 운반수단 개발 및 배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술핵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NPT 가입국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 위협을 가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은,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단순히 위협만 가하고 있을 것인가입니다.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에는 실제로 핵공격을 감행해 상대의 공격을 중단시키고 러시아가 원하는 목표를 강제로 달성하려는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 억지론의 관점에서 ‘억지의 신뢰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길은 핵보유국이 적대국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 사용 문턱을 계속 낮춘 상태에서 러시아가 억지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제한적 수준’이라는 단서 아래 핵 전쟁을 감행하는 것일테고요.

요컨대, 러시아가 제시한 핵의 새로운 임무, 그러니까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전략'이란 냉전 시기 제한핵전쟁론을 러시아식으로 변형한 것이며, 핵무기 사용 기준까지 낮춘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제도적·전략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위험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핵무기 현대화와 핵 경쟁의 가속: 맞춤형 억제 전략

대상별·수단별 분화된 접근: 맞춤형 억지 전략의 등장

유연반응전략이든 확증파괴전략이든 냉전 시기 핵 억지론은 두 강대국의 핵 독점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으로 핵무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게다가 핵 강대국의 경쟁이 미국과 러시아 양자 경쟁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삼자 간 경쟁으로 전개된 상황에서 기존 전략으로 핵 위기를 통제하고, 핵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신흥 핵보유국의 2차 타격능력(보복 능력)은 핵 강대국에 비해 훨씬 불안전하고 취약해, 보복 능력을 강조하는 핵 억지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두 나라만 관계된 양방향 억제와 달리 세 나라 이상이 얽힌 다자간 억지는 핵 무기 규모와 역할, 체계가 모두 달라 협상도 어렵고, 다른 국가의 개입이나 연계 행동으로 인해 핵 억지 시나리오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핵 억지 시나리오는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미중 간 핵 억지 시나리오는 다시 소련과 인도에도 영향을 미칩니

다. 그렇다고 핵강대국과 신흥 핵보유국, 나아가 다양한 지역 적대국가들에 대해 핵 억지 전략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핵 전략가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맞춤형 억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억제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억제의 방법과 수단도 세분화해, 대상별로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죠. 억지란 기본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을 갖추고 있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의지(will)가 잠재적 침략국에 신뢰성(credibility) 있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군사력 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맞춤화해서 억지하려는 대상의 가치관, 위협 인식, 정책 결정 메커니즘까지 분석해 각기 다른 전략적 메시지와 수단을 설계해야 하죠.

예컨대,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국 지위 상실과 확전 통제력 붕괴 가능성을, 중국에는 G2로의 도약 불가능성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북한에는 정권 붕괴와 체제 생존 불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차별화된 맞춤형 억제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대상별 차별화’라고 합니다. 확전 경로도 다양한 만큼, 무력시위와 재래식 공격, 핵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공격, 국지적 핵 사용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억지 신호를 구성하고, 상대국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할지도 계산합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에서는 이를 ‘새로운 억제 계산’이라고 하고요.

억지 수단 또한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같은 전통적 수단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 정밀타격무기, 첨단 무인기, 사이버 전력 등 재래식·비대칭 전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변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기 개발과 핵무기 현대화도 병행합니다. ‘군사수단의 다양화’라고 하는데요, 맞춤형 억제전략에서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외교·경제·기술·정보 등 국가 역량 전반을 동원해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NATO 같은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파이프 아이즈(Five Eyes), 오커스(AUKUS) 등 정보·사이버 협력체제도 이 전략에 포함됩니다. 국제법 위반, 인권 및 안보 문제를 겨냥한 경제제재도 적극 활용하고요. 이를 ‘포괄적 접근’이라 합니다.

맞춤형 억지 전략의 제도화: 핵 선제사용과 저위력 핵무기의 부상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이하, 2002 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맞춤형 억지 전략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대상별 차별화’, ‘군사수단의 다양화’ 같은 맞춤형 전략의 핵심 개념이 적용되거든요.

2002 NPR에서는 먼저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 핵보유국과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지역 위협국(2002 NPR에서는 ‘불량국가’로 명명)으로 구별하고, 지역 위협국 5개국도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전통적·잠재적 핵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안정과 군비통제, 위기관리를 목표로, 지역 위협국—위험국인 5개국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지휘부 타격, 신속 대응을 목표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죠. 대상별로 차별화된 억지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핵 3축 체계 대신,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조합하는 ‘새로운 3축 체계’를 제안합니다. 핵-비핵 공세적 타격 체계, 미사일 방어(MD), 신속 대응 방위 인프라인데요, 핵무기만으로는 테러와 같은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전력을 강화하면서 핵태세 역시 초강대국으로의 지위는 유지하자는 구상입니다.

2002년 1월, NPR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특히 NPT 비핵보유국과 평화운동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당시에는 핵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사용 의혹을 갖고 있었지만 NPT 가입상태였습니다.) NPT 출범 당시 핵 보유국들은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1995년과 2000년,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NPT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선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사실상 철회한 셈이었습니다.

2002 NPR은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께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제약해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5kt 미만 저위력 핵무기 연구·개발 생산을 금지했던 스프랫-퍼스(Spratt-Furse)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위력 핵무기 개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NPT 핵비보유국과 평화운동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열린 것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2002 NPR을 발표하기 직전인 2001년 12월 13일,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제한협정(ABM)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합 억지와 저위력 핵무기의 복귀: 맞춤형 억지의 실전화

개별 국가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직접 제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이하 2018 NPR)입니다. 2018 NPR은 2002 NPR과 달리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 안정성이 아니라 새로운 강대국 경쟁의 틀에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확전을 통한 분쟁 완화’

목적으로 전술핵무기와 우주·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강대국 간 경쟁으로 회귀했다면서, 러시아를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심 전략국으로 평가합니다. 중국 역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형 무기 개발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도 동시에 현대화하며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을 핵전력 현대화와 지역·전략적 판도 변화에 나서는 주요 전략 경쟁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러시아는 가장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군사·핵 위협 상대임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장기적 경쟁자로 평가하죠.

2018 NPR에서는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며, 지하시설과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노린 정밀 타격 역량을 공개 천명합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한 압도적인 비핵 군사력 우위를 통해 지역 역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죠. 핵 확산 징후가 있거나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경우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음을 명시하기도 하고요. 결정적인 억지 신호, 행동별 책임귀속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핵 3축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억지 수단의 선택지를 다변화할 것임을 공식화합니다. 대규모 보복 능력에 더해 저위력 핵탄두, 지상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신형 해상탐제 순항미사일 등 ‘선택적 옵션’을 새로 마련하고, 핵과 재래식, 정밀유도, 방어체계, 사이버전력까지 포괄하죠.

트럼프 행정부(2018 NPR)는 군사적 선택지를 다변화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2010 NPR)보다 핵 사용조건도 더 확대시켰습니다. 2010 NPR은 핵무기의 기본적 역할은 핵공격 억제라며 “극단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2018 NPR에서는 ‘전통적 핵 공격’, ‘생화학 및 생물학 공격’, ‘대규모 재래식 공격’ 외에 ‘사이버공격과 핵 지휘통제 시스템 공격’도 핵 사용조건에 포함시켰죠. 또 ‘미국은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NFU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핵전략 강화 방안에 나섭니다.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께 전략핵무기, 핵지휘·통제·통신 체계의 현대화에 나섰는데요, 수소폭탄에서 핵융합 부분만 제거해 저위력 핵무기(W76-2)로 개조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배치하는가 하면, 콜럼비아급 신형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하고, B-21 신형 스텔스 폭격기도 100대 이상 대량 생산에 착수합니다.

2019년 8월 2일에는 INF 조약 탈퇴를 선언합니다. 표면적 명분은 러시아가 사실상 중거리 핵미사일인 9M729/SSC-8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 등 제3국은 INF 조약의 대상이 아니라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의 핵 능력만 억제되고 있다는 불만이 배경에 있었죠. 미국이 동맹국과의 통합적 억제전략을 구사하려면 동맹 안보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와 맞물린 군사적 옵션의 실질적인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18 NPR의 특징 중 하나는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괄적 억제(Comprehensive deterrence) 역시 군사, 외교, 경제 등 여러 자원을 폭넓게 동원하지만 이보다 더 유기적으로 융합·조정되어 다층적 억제 구조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동맹국과의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참여 이상으로 실제 현장 적용에서의 공동 운용성, 통합 지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 억제 전략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 일본 등에서 미국과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운영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는 물론 정보, 사이버 전력 연계도 강화된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제한핵전쟁론의 현대적 부활과 핵경쟁의 재점화

‘맞춤형 억지’ 전략은 제2핵시대 신흥 핵보유국이 출현하고,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증파괴에 기반한 핵 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별·상황별 억지 전략을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마련하고, 군사수단도 핵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밀타격 무기등 첨단 재래식 무기로 확장해 선택지를 다변화해 신속 대응함으로써 위기관리와 전쟁 억지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언뜻 핵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듯 보였지만, 정작 ‘맞춤형 억지’ 전략은 MD 개발, 저위력 핵무기와 중거리 핵무기 개발, 핵무기 투발 수단의 현대화를 촉발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맞춤형 억지’가 필요하며 핵 군비통제의 상징인 탄도미사일방어체계제한협정(ABM)에서 탈퇴하였고, 핵군축의 상징인 INF 조약에서도 탈퇴하면서, 핵군축의 역사적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죠.

‘맞춤형 억지’ 전략이 핵무기 현대화 경쟁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핵에 의한 억지를 배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선택지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국지적 핵사용을 선택지로 둔 채 다양한 위협 처방을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빌어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춤형 억지’는 1970년대 제한 핵전쟁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비보유국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소극적 안전보장(NSA)의 법제화, 핵 선제 불사용(NFU), 유일 목적(SP)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핵무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최대한 배제하지 않는다면, ‘맞춤형 억지’ 전략은 핵무기 현대화와 핵 경쟁을 더욱 가속할 뿐입니다.

3. 억지가 아니라 위협의 공식화: 핵억지론의 서사

이제, 핵무기로 전쟁을 막는다는 주장, 이른바 핵억지의 논리가 핵 경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억지론, 즉 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국제정치의 중심 논리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다양한 변형과 함께 여러가지 이름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각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상은 핵 전쟁 가능성을 낮추기보다 되레 높여온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핵무기는 전쟁을 억지하는가?

미국의 핵위협은 중국의 참전을 막았는가?

핵무기는 전쟁을 억지하는가? 대량보복전략과 핵기습론이 제기되었을 당시만 해도 핵 전략가들조차 핵의 전쟁 억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억지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거론된 것 말고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가 한국전쟁입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핵으로 위협했지만, 핵억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7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29 폭격기가 대평양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뉴욕 타임스》에 보도되었고, 그해 11월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1951년 4월에는 핵무기와 함께 (탑재는 하지 않은 채) B-29가 콰에 재배치되었고, 1953년에는 새로 취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전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러 채널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핵위협에 개의치 않고 참전했고, 결과적으로 핵 억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신뢰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전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전쟁이 ‘핵 억지’ 신화를 반박하는 사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했는가?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른바 4차 중동전쟁도 핵 억지가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스라엘은 196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1967년 3차 중동전쟁 무렵에는 최소 2기 이상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플루토늄 원자로와 함께 핵무기 제작 기술도 갖

고 있음을 암시하였고, 1973년 전쟁이 발발하기 전, 주요 외신과 군사 연구소는 이스라엘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과 추정 보유량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합니다. 3차 중동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시나이 반도 반환을 위한 협상에 강대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전략적 의도였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실제로 핵무기 사용이 심각하게 고려되었지만, 메이어 총리는 이를 거부했고 미국도 만류했습니다.

전쟁 자체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전쟁을 전략적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공격, 방어선 붕괴, 과거보다 많은 사상자 등으로 인해 핵 억지의 효과는 의문시되었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전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랍국가들의 선제공격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1973년 전쟁은 핵 억지력의 한계를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종전과 협상 과정에 주목해 이스라엘이 핵 보유 및 배치 사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강대국의 개입을 유도하고 확전을 막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집트와 시리아 역시 전면전보다 시나이 반환이라는 제한된 목표 아래 강대국의 중재를 염두에 두고 전쟁을 개시한 만큼, 이스라엘 핵무기가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4차 중동전쟁)의 확전을 막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2) 두 번째 질문, 핵무기가 평화를 보장하는가?

쿠바 미사일 위기와 핵 억지 담론의 선택적 해석

그렇다면 전쟁 억지에 실패한 경우 말고 성공한 사례는 없는가? 전쟁 발발을 억제했다거나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막은 사례는 없는가? 이에 대해 핵억지론자들이 꼽는 사례가 있습니다. 1962년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핵억지론자들은 쿠바 미사일 위기야말로 핵 억지가 실제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무력 충돌 없이 위기가 해소되었는데, 여기서 핵 억지가 작동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소련 미사일의 쿠바 배치를 막기 위해 해상봉쇄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발사된 어떤 핵무기도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며 사실상 핵보복을 선언했습니다. 핵무기 실전 준비태세 최고 수준인 데프콘2(DEFCON2)를 발령하기도 했고요. 소련 역시 미국의 해상봉쇄를 ‘전쟁행위’로 간주하면서, 소련의 미사일 배치를 막기 위해 “미국이 쿠바 침공을 강행하면 응분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핵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미 공군의 U-2 정찰기가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고, 소련의 핵무장 잠수함 B-59는 미 해군의 수중 폭뢰공격으로 위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련의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던 소련 상선이 회항을 결정함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핵억지력이 작동했다고 해석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냉전적 시각에서의 평가일 따름입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이 평화를 가

져왔다는 식의 해석이니까요. 반대로 보자면, 미국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으므로 소련의 핵 억지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됩니다. 핵 억지력이라는 가설에 국적이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게다가 이 같은 설명 방식은 냉전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핵은 전쟁 억지력이 있다’고 전제하는 자기지시적 설명 방식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타협한 것은 전쟁 억지에 효과적인 여러 수단에 의해 촉진되었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대로 “핵은 전쟁 억지력이 있고 이 때문에 쿠바 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건, 쿠바 미사일 위기 자체가 핵 경쟁의 산물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해 전인 1961년, 미국은 소련과 인접한 터키에 주피터 핵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던 것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성격도 있었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위기만 고조시켰지만요. 핵 경쟁의 결과로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핵 억지로 평화가 왔다고 설명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현실을 호도하는 설명입니다.

후일 밝혀졌지만, 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기했을 때, 미국도 터키에 배치했던 주피터 핵미사일을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소가 핵 억지 때문이 아니라, 전면전을 피하려는 외교적 결단의 결과였음을 뒷받침하죠.

장기평화? 핵억지의 자기지시적 신화

1945년 이후 미국과 소련, 나아가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직접적인

전면전이 발발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일부 냉전 사가들과 핵억지론자들은 이를 ‘장기평화(Long Peace)’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의 부재’라기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한 두 강대국 혹은 두 블록 사이에서 전면전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길게 지속된 평화의 이유를 두고, 핵 억지론자들은 핵무기 덕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두 강대국이 핵 억지력의 균형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전면전이 자제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핵 보유 강대국 사이의 전면전은 자멸을 의미하므로, 핵의 공포 앞에서 무력 충돌만큼은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 즉 전면전이 없었던 건 핵의 억지력 때문이라는 주장은 결과가 원인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핵 억지 때문이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데,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핵 억지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설명은 반증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핵은 억지력이 없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핵은 억지력을 갖는다.”는 논리인데, 이는 ‘부재의 존재’를 입증하는, 이른바 ‘악마의 증명’과도 같은 구조입니다. “UFO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UFO는 존재한다”와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조상 묘를 명당에 쓰면 자손이 번창한다”는 주장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불운이나 재난이 없었음을 명당 덕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과학이나 검증이 아니라 신화화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핵을 ‘핵 신화’, ‘핵 숭배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이런 설명 방식은 전쟁 억제에 기여했을 수 있는 다른 요인

들, 이를테면 외교적 타협이나 국제기구의 중재, 경제적 상호의존과 민주주의의 확산, 인권과 군축을 위한 국제기구와 규범의 발달, 평화운동과 여론 등의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핵 억지론자들은 핵무기만이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핵 억지가 효과가 있었다’는 전제를 먼저 세워두고, 과거의 평화를 그 전제에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요컨대 장기평화에 대한 핵 억지론의 설명은, 결과를 원인의 증거로 삼는 자기지시적 논리의 전형입니다. “전쟁이 없었으니 억지가 성공했다”는 이 설명은, 결국 “핵 억지가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핵 억지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3) 세 번째 질문, 핵무기가 안보를 보장하는가?

‘억지는 작동한다’는 믿음의 자기증명

앞서 이야기 했듯 핵무기가 전쟁을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방증에도 불구하고, 핵 전략가들은 이러한 실패를 핵억지론의 한계나 오류로 인정하기보다는, ‘억지의 신뢰성’과 ‘보복의 신뢰성’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핵억지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핵무기는 본래 ‘억지력이 있다’는 전제를 세운 뒤,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보복 의지와 능력을 상대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전형적인 자기지시적 논리입니다. 그리고는 억지와 보복의 신뢰성을 갖도록 핵 전

략을 설계해야만 핵 억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핵 억지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핵 전략은 점점 더 정교화되었고, 그 결과 핵억지론은 실패조차도 자신을 강화하는 논리로 흡수하게 됩니다.

억지와 보복의 신뢰성이라는 개념에 기반해 새롭게 정비된 핵전략이 바로 확증파괴전략이고 제한핵전쟁론입니다. 보복의 신뢰성을 목표로 마련한 억지 전략이 확증파괴전략이라면, 제한핵전쟁론에서는 핵 사용 자체나 확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의 신뢰성’, 즉 전면적 핵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제의 믿음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는 시민을 핵 보복의 인질로, 다른 하나는 확전의 인질로 삼는 전략이죠.

억지 신뢰성의 역설: 안보 딜레마

‘보복의 신뢰성’과 ‘통제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국가의 안보는 보장되는가? 이것은 핵 억지 전략이 내세우는 핵심 가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노력 자체가 새로운 위협을 만듭니다. 안보 딜레마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보복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하 격납고, 이동식 발사대,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초고속 미사일이나 자동화된 발사 체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제한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전쟁이 벌어져도 핵전쟁이나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는 제한적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핵이 사용되더라도 제한적 용도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선제 공격용 고정밀

재래식 무기, 저위력 핵무기, 적의 조기경보 및 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합니다.

이런 억지수단을 갖추려는 시도는 군사력의 고도화와 무기 체계의 정밀화를 부릅니다. 문제는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는 과정이 상대의 불안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대도 유사한 방식으로 핵전력을 증강하게 되고, 상대의 핵 억지력 강화는 안보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억지를 위한 무기’로 간주되며, 방어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오히려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안보를 위한 전략이 상호 불신을 고착화하고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억지전략이 야기하는 ‘안보 딜레마’입니다.

확장억지, 핵확산: 안보 위기의 세계적 구조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령 미국과 소련(러시아)이 핵무기의 양적 균형을 이룬다해도, 동맹국의 안전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비롯하는데요, 미국과 소련(러시아)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소련과 인접해 있거든요. 미국과 소련(러시아)은 전략핵무기의 균형만 맞추면 되지만, 소련에 인접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는 핵 균형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유럽은 전략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확전 가능성을 억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유럽 본토에서의 전쟁 억지를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 본토로의 전쟁 확대를 우려해 제한핵전쟁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확산 방지에 방점을 둔 억지 전략을 취합니다. 전략적 목표의 차이로 인해, 여기서도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핵 억지론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말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핵전력을 개량하려 했던 것과 2020년대 들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운영하면서 통합 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 속합니다. 그 결과는 군비경쟁의 확산과 핵 경쟁의 지역화를 초래하고요,

한 가지 더 간과해서는 안 될 쟁점은, ‘핵무기의 보복 신뢰성’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 개발 기술의 확산과 함께, 핵 억지론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분쟁을 겪거나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국가들에게 ‘핵 억지’만큼 즉각적이고 단순한 해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보복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핵 확산을 자극하고, 도리어 핵 억지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킵니다. 여기서도 안보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1980년대 유럽 NATO의 핵 재무장과 핵전쟁 공포로 대표되는 핵 위기, 1990년대 신흥 핵보유국과 핵야망국의 등장, 그리고 오늘날 ABM·INF 조약의 종료와 New START 이행 중단 등 핵군비통제체제의 해체와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전력 고도화까지, 이 일련의 흐름은 핵 억지가 말하는 안보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핵 억지는 안보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불안

을 구조화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4. 핵억지론의 자기모순과 평화의 조건

핵 억지론의 진화과정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핵전쟁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핵 전략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유연반응전략과 제한핵전쟁론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략을 고도화해왔습니다. 결국 핵 전략의 진화과정은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핵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역사라는 평가가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핵억지론은 여전히 핵무기가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핵 보유 강대국 사이의 전면전이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핵 억지력이 작동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핵억지론은 그 타당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거나 논박할 수 없게 만든 채, 자기완결적인 설명 체계 안에서만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 논리 구조는 과학이나 경험적 검증에 기초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믿음과 반복을 통해 정당성을 구축하려는 신화적 서사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설명이 ‘평화’를 독점하는 순간,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해 정작 필요한 조건들이 지워진다는 점입니다. 외교적 타협과 신뢰 조치, 민주주의의 확산, 군축을 위한 조약과 규범, 그리고 반전·반핵평화운동의 힘 같은 요소들이 그렇습니다.

1980년대 유럽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반핵평

화운동은 냉전 시기 핵 위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핵 군축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투쟁은 단지 군축이라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적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핵 억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시민을 불모로 삼는 전략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류는 핵무기가 보장하고 핵무기가 관리하는 ‘평화’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문명의 마지막 단계, 자멸로 향하는 파국일 것이고요.

European
Nuclear
Disarmament

3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발자취

동유럽과 서유럽의 분할을 뛰어넘어
핵무기 폐기를 위해 단결하자는 유럽 핵군축 운동 포스터
<출처: AMAZON>

3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발자취



그림1 히로시마의 참상. 자신만 살아남았음을 깨달은 많은 생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다.
<출처: AP연합뉴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9일 나가사키에 미국이 떨어트린 원자 폭탄은 바로 그때,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삶을 파괴했습니다.

핵무기의 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인류는 핵무기를 통제하고 폐기하기 위해 부단히 걸어왔습니다. 3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발자취를 세계 핵무기 반대 운동의 역사와 국제 조약의 흐름을 따라 살펴해보겠습니다.

1. 핵무기 반대 대중운동

핵과학자들의 반성과 실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핵무기의 사용 중단과 평화 추구를 위해 모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 조지프 로트블랫, 레오 실라르드 등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핵무기의 파괴력을 목격한 후 그 누구보다 핵무기가 가져올 위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1945년 「시카고 핵 과학자 회보」를 창간하여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중교육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후 이 과학자들은 회보의 명칭을 「핵 과학자 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로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가며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국제사회의 군비통제를 촉구했습니다.

「핵 과학자 회보」의 가장 유명한 캠페인은 1947년에 시작한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인류 멸망을 뜻하는 자정을 기준으로 핵위험이 인류를 얼마나 가까이 위협하고 있는지 매년 시계바늘로 보여 줍니다.

1949년 4월, 프라하에서 제1차 평화 지지자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72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평화와 군축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핵과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 정치인, 활동가들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핵무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

협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림 2 지구 종말 시계 2025년은 자정 89초 전으로 지구 종말 시계 도입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공격 위협의 지속, 북한의 핵실험이 자정에 가깝게 시계 초침을 앞당긴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출처: AP뉴시스]

1950년, 제2차 평화 지지자 세계대회는 ‘스톡홀름 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호소문은 모든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고,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명료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지지가 이어져 2억 7천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스톡홀름 호소문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는 인류가 핵 없는 세상

을 위해 단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5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철학자이자 평화운동가 버트런드 러셀은 주요 과학자들과 함께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핵전쟁의 파괴력을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핵무기의 종식을 위해 인류애와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중

“인류가 목격한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과학자들이 모여서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위험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결의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논의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국가나 대륙이나 종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인간이라는 종의 일원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준엄하고 끔찍하지만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

...

우리가 생각만 바로 한다면, 우리 앞에는 행복과 지식과 지혜의 부단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서로 간의 분쟁을 저지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인류를 기억하고, 다른 것은 잊어버리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낙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후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 영감을 받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 핵무기와 군비경쟁의 심각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0여 개국의 과학자들은 캐나다의 작은 마을 퍼그워시에서 만나 인류가 당면한 핵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1957년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열린 제1차 퍼그워시 회의에는 소련의 물리학자 세르게이 카피차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는 정치적 이념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과학자들이 함께 핵무기 문제를 논의한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퍼그워시 회의는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핵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의 핵무기 반대 여론과 원자폭탄·수소폭탄 금지 운동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그곳의 모든 삶을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1954년, 이러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미국이 태평양 마셜제도의 비키니섬 일대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면서 일본 어선 제5후쿠류마루(럭키드래곤)호 선원들이 전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다시 한 번 핵무기의 위험을 온몸으로 체감했고, 핵무기 반대 정서가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시작한 원자폭탄 반대운동은 도쿄에서 제5후쿠류마루호 피폭사건에 항의하는 연대운동으로 이어지고 전국적인 원자폭탄·수소폭탄 반대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대중

적인 반핵평화운동의 확산에 적극 나섰습니다. 1950년에는 645만명이 ‘스톡홀름 호소문’에 서명했습니다. 1954년 ‘스기나미 호소문’으로 시작한 원수폭금지서명운동에는 1955년까지 3,200만여 명이 참여하여 핵무기의 전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스기나미 호소문(1954) 전문

모든 사람들이 수소폭탄 금지를 위해 청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와 국민에게 촉구합니다.
인류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합니다.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은 자국의 경계를 넘어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평화 지지자 세계대회, UN 군축 회의, NPT 평가회의 등 국제 공간에서 핵무기 감축과 군비 축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반핵평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955년부터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일본의 반핵평화운동가들과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모이는 자리로서, 현재까지도 매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리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955년 8월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중 히로시마 피해 주민 발언

“원자·수소폭탄이 금지되었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오히려 오늘이 출발점입니다.”

일본 시민들의 강력한 핵무기 반대 대중운동은 일본이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피해국으로서 피해자의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원폭피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은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1968년 1월 사토 에이쿠 총리가 발표한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국회 서명 이후, 비핵 3원칙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와 함께 평화주의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치에서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아, 어떤 정치 세력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의 군사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평화주의를 헌법에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1950년 한국 전쟁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



그림 3 2014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원수협(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원수금(원수폭금지일본 국민회의) 두 단체가 각각 매년 개최하고 있다. <출처: 신일본부인회>

번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핵무기 없는 유럽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 유럽에서의 평화운동

핵군축캠페인(CND,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과 올더마스톤 행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체제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양 진영 간 대립의 한복판이었던 유럽에서는 핵무기 반대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58년 부활절 주말, 영국 런던에 약 만여 명의 사람이 핵무기 반대를 외치며 모였습니다. 이들은 영국 정부에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일방적인 군축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은 4일 동안 84km를 행진해 핵무기 연구소가 있는 올더마스톤에 도착하는 대규모 평화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행진은 ‘올더마스톤 행진’으로 불리며, 영국과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올더마스톤 행진은 해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1959년에는 6만 명이 참여했고, 쿠바 미사일 위기 등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1962년에는 1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올더마스톤 행진을 조직한 핵군축캠페인(CND)은 1957년 영국의 핵 폭탄 실험과 핵무기 논쟁을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1958년 공식 출범한 핵군축캠페인은 지식인, 학생, 노동조합원, 종교 단체 등 영국 각계



그림 4 제 1차 올더마스턴 행진 <출처: CND>

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영향력은 전 유럽에 걸쳐 확산되었습니다. 핵군축캠페인은 핵무기 개발과 군비 경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핵 없는 세상을 목표로 영국과 유럽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군축과 평화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63년 미국, 소련, 영국이 대기권, 우주 및 수중에서 핵실험을 금지하기로 서명한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 Partial Test Ban Treaty)이 체결되고, 1970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 발효하고,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이미 배치된 전

략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양을 동결하기로 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I)이 체결되면서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유럽에서 냉전의 고조와 반핵평화운동의 폭발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의 화해 분위기가 흔들리면서 두 강대국의 핵무기 경쟁이 다시 격화했습니다.

1977년 소련은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국제사회에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II(SALT II,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II)이 불발되면서, 두 나라의 핵 군비 경쟁은 더욱 불거졌습니다. NATO는 소련의 행보에 대응해 1979년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II와 순항미사일을 서유럽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은 다시금 냉전의 중심에 섰고, 핵전쟁 위기가 한층 현실로 다가오자 유럽 시민들은 핵무기 반대 운동에 폭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압박 속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1년 소련이 SS-20 미사일을 모두 철수하면 미국도 유럽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하겠다는 ‘제로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거대한 반핵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미 들불처럼 번진 반핵평화운동을 꺼트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핵무기 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터져 나왔습니다. 제로 옵션을 발표한 1



그림 5 1982년 6월 11일 뉴욕에서 열린 핵무기 반대 집회. 이 집회에는 100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인 집회였다. 유럽에서의 반핵운동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반핵 여론은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흔들었다. <출처: Getty Images>

년 뒤 1982년, 미국 뉴욕에서의 반핵평화집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핵무기 반대를 외쳤습니다.

영국에서는 핵군축캠페인이 시위를 지속하며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수만 명이던 핵군축캠페인 회원 수는 1980년대 초반에 10만 명, 중반에는 2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NATO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예정이었던 영국의 그린햄 커먼 공군기지에서는 여성들이 핵무기 반대 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지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1982년 12월에는 수만 명이 공군기지를 둘러싼 인간 사슬을 만들어 중



그림 6 1982년 그린햄 커먼 공군기지 인간 사슬 캠페인 <출처: CND>

거리 미사일 배치에 저항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전 사회적인 반핵평화운동이 큰 물결을 이뤘습니다. 1983년 10월 29일 종교단체부터 노동조합까지 각계각층이 주도해 “네덜란드에서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열린 시 위에는 약 55만 명이 참여해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위는 네덜란드 정부가 NATO 미사일 배치 결정을 연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에서도 반핵평화운동의 불길은 거셌습니다. 1983년 3월 6일 서



그림 7 1983년 네덜란드 반핵집회 <출처: Roel Burger>



그림 8 1983년 독일 부활절 행동. 이 행사에서 한 노동조합 간부는 “평화운동은 노동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평화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평화운동이 단결한다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이 독일 부활절 행동에 참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출처: Bildarchiv Preußischer Kulturbesitz>



그림 9 1983년 10월 서독 수도 본, 독일 녹색당이 주도한 반핵 시위 - “나토 소속 군인들은 크루즈 미사일과 퍼싱 미사일에 “안 돼!”라고 말한다!” <출처: Wieseler>

독 연방선거에서는 서독 반핵평화운동을 주도했던 독일 녹색당이 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신생 군소정당이었던 녹색당의 의회 진출은 당시 독일 사회에서 반핵평화 여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4월 1일부터 5일까지 “핵이 없는 유럽의 실현은 우선 독일의 대지에서부터”를 슬로건으로 이뤄진 독일 부활절 행동은 핵·미사일 배치 계획에 반대를 표명한 독일노동총동맹을 비롯하여 약 75만 5천명의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시작한 반핵평화행동주간의 마지막 날, 후에 ‘뜨거운 가을’로 불리는 10월 22일에는 독일 전체에서 150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유럽핵군축운동(END, European Nuclear Disarmament)과 진영을 초월한 실천

1980년 4월 유럽 핵군축을 위한 호소 中

“우리는 지금 대단한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세대는 핵전쟁의 그늘 아래 태어나서 그 위험에 익숙해있다. 관심은 무감각으로 대치되었다. 한편, 항상 위험 아래서 살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공포는 유럽 대륙 전역으로 뻗어있다.

...

우리는 양대 초강대국에 유럽으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소련에 SS-20 중거리 미사일 생산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며 미국에 유럽 배치를 위한 크루즈미사일 및 퍼싱II 미사일 개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또 일반적이고도 완전한 군축에 관한 효과적인 협상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SALT II의 비준을 촉구한다.

...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달리하는 유럽의 벗들에게 우리가 이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호소한다. 우리는 전유럽에 걸치는 운동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국가와 의견을 달리하는 대표들이 회합을 가지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이며, 대학 간, 교회 간, 여성단체 간, 노동조합 간, 청년단체 간, 전문가 집단 간, 개인 간의 보다 비공식적인 교류가 공동의 목적, 즉 핵무기로부터 전 유럽을 해방시킨다는 목적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유럽 핵군축캠페인은 서유럽에서 폭발하는 반핵평화 운동을 선도하며, 진영을 초월하여 유럽을 아우르는 연대운동을 구축하려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유럽 핵군축캠페인은 당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영향 아래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뉘어 있던 유럽 정치 지형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반미·반제국주의 아래 소련 비판을 꺼리던 운동가들과, 반공주의 아래 미국 비판을 주저했던 운동가들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핵평화 운동을 매개로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유럽 운동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서유럽과 동유럽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교류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럽 핵군축캠페인의 지도부 인사들은 핵군축캠페인의 지도부를 겸하며 유럽을 아우르는 평화운동을 도모했습니다. 이들은 초국가적 평화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유럽의 각국 운동과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운동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유럽 핵군축캠페인 운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유럽 비핵지대화’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운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초



그림 10 동유럽과 서유럽의 분할을 뛰어넘어 핵무기 폐기를 위해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유럽 핵군축 운동 포스터 [출처: AMAZON]

국가적 네트워크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비핵지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에서의 반핵평화운동, 특히 1980년대 미·소 핵위기의 고조 속에서 폭발한 반핵평화운동은 각 국가의 각계각층, 냉전적 진영논리, 군 유럽핵군축운동(END)은 서유럽에서 폭발하는 반핵평화운동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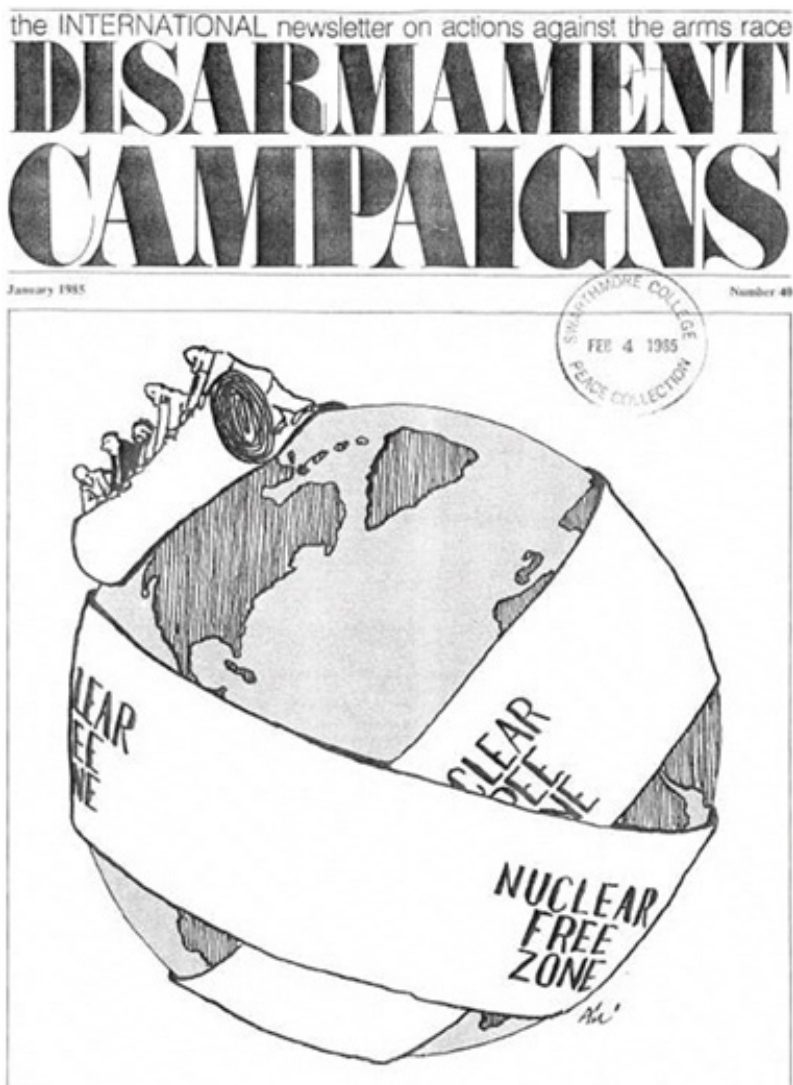


그림 11 유럽 비핵지대 캠페인 전단지. 유럽에서부터 시작해 전 세계를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

비핵지대 조약

지역 내 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핵국가 영토 내에서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비핵지대는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4년 현재, 우주와 심해를 포함한 9개의 비핵지대 조약에 따라 전 세계 115 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으며, 이는 지구 전체 영토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조약	시기	내용
남극(Antarctic)	1961	조약 5조가 남극대륙에서의 핵폭발 또는 방사능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
우주(Outer Space)	1967	조약 4조가 지구 주변 궤도와 외기권에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파괴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배치하는 것을 금지
틀라텔로코(Tlatelolco)	1969	남미와 카리브해에 비핵지대 설치
심해저(Seabed)	1972	심해저와 대양저(ocean floor) 및 심토(subsoil) 내에 핵무기 배치 금지
라로통가(Rarotonga)	1986	남태평양 비핵지대 설치
방콕(Bangkok)	1997	남아시아 비핵지대 설치
몽골비핵지대(Mongolian nuclear-weapon-free zone)	1992	몽골을 단일 비핵지대화
세메이(Semei)	2009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비핵지대 설치
펠린다바(Pelindaba)	2009	아프리카 비핵지대 설치(신생 남수단 제외)



그림 11 2010년 NPT 평가회의 전날인 5월 2일 뉴욕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장의 주도하에 15,000여 명의 시민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UN 본부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핵보유국의 핵군축 성실 이행과 핵확산 금지를 넘어 핵무기의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도하며, 진영을 초월하여 유럽을 아우르는 연대운동을 구축하려는 실천이었습니다. 유럽핵군축운동은 당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영향 아래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뉘어 있던 유럽 정치 지형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반미·반제국주의 아래 소련 비판을 꺼리던 운동가들과, 반공주의 아래 미국 비판을 주저했던 운동가들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동유럽 운동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서유럽과 동유럽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교류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럽핵군축운동의 지도부 인사들은 핵군축캠페인의 지도부를 겸하

며 유럽을 아우르는 평화운동을 도모했습니다. 이들은 초국가적 평화 운동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유럽의 각국 운동과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운동을 서로 연결 했습니다.

유럽핵군축운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유럽 비핵지대화'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비핵지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에서의 반핵평화운동, 특히 1980년대 미·소 핵위기의 고조 속에서 폭발한 반핵평화운동은 각 국가의 각계각층, 냉전적 진영논리,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로질러 광범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계층과 진영을 뛰어넘어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자국의 일방적인 핵군축을 요구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 우리부터 시작하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초강대국은 더 이상 노골적인 핵무기 경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1987년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모든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철수하고 폐기하기로 한 이 조약은 당시로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00년대 핵무기 반대 운동과 핵무기금지조약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핵 군비축소 협정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실제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핵전쟁의 위협은 한때 역사상 가장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핵전쟁의 위험은 지속되었습니다.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벌어진 카길 전쟁은 비공식 핵보유국 간의 충돌로, 핵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 속도를 늦추고, 동시에 핵무기 현대화에 주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 사용 위협을 강화했고, 중국도 핵전력을 늘리고 첨단화 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간의 이러한 긴장은 인류가 쌓아온 핵에 대한 금기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2000년대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냉전 시기에 구축된 국제 핵질서, 특히 핵무기비확산조약을 더욱 발전시키고,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노력은 인류가 핵무기 금지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대중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 핵무기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과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비확산조약과 핵무기 확산의 '방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핵무기의 관리와 통제였습니다. 특히 1960년대 미국과 소련 간의 출혈적인 핵 군비 경쟁과 여러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시도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 3월, 오늘날의 핵 통제 국제질서를 대표하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 발효되었습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은 핵보유국의 핵군축(수직적 확산 방지)과 비핵국가로의 핵 확산 방지(수평적 확산 방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규정하며 세 가지 주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핵보유국은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양도할 수 없으며, 비핵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제조하도록 돕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조약이 발효된 당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다섯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외에,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제1조, 2조). 둘째, 핵보유국은 비핵 국가가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의 적절한 사찰 아래 지원해야 합니다(제4조). 셋째, 핵보유국은 핵군축과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를 지닙니다(제6조).

2025년 현재, 191개 국가가 가입한 핵무기비확산조약은 세계 핵질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은 특히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는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현재 핵보유국은 공식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비공식 4개국(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뿐입니다. 1970년 조약 비준 당시 약 26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비확산조약은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제 6조에 따른 핵군축 의무를 공식 핵보유국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핵탄두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대규모로 핵무기를 감축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감소세가 크게 둔화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처럼 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에서 이탈하거나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이 핵무기비확산조약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테러 집단과 같이 국가가 아닌 단체들이 핵무기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핵무기비확산조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과마저도 취약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더 나은 국제적 합의를 통해 핵폐기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일부 국가가 핵무기비확산조약의 한계를 지적하며 임의로 규칙을 어기거나 이탈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큼니다. 이러한 이탈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국제사회의 성과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인류는 여기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 삼아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과 핵무기의 '철폐'와 '금지'

2021년 1월 22일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발효되었습니다. 1970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발효 이후, 인류가 51년 만에 핵무기금지조약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이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제정된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의 비극 이후 76년 만에 인류가 이룩한 이 성과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가 법적으로 구체화한 쾌거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직접적 전신은 대량살상무기로서 핵무기를 금지하고자 한 핵무기금지협약(NWC)입니다. 여기에는 냉전 종식 이후의 긴 흐름이 있습니다. 1994년 UN총회는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이 어떠한 상황에서건 국제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의견을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한 78개국의 의도는 핵무기의 불법화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핵무기의 위협·사용이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에 ‘일반적으로’ 반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법이라고 확정지어 명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권위 있는 국제 사법기관이 처음으로 핵무기의 위법성을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UN총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안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NPT 6조(핵군축)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 실험, 배치, 비축, 전달,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하는 핵무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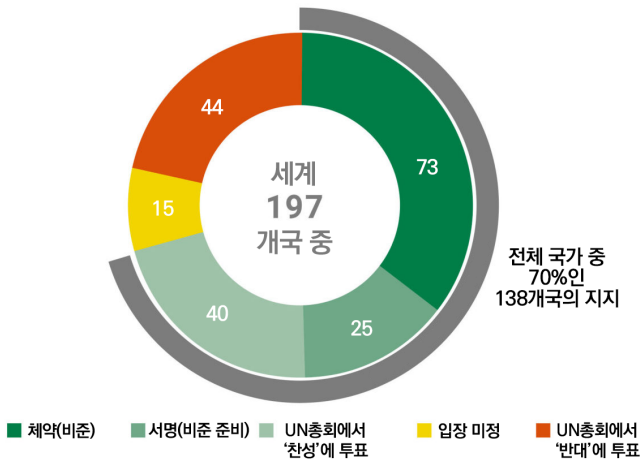


그림 12 '폭탄을 금지하라!' 현수막 앞의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활동가들. 이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07년 핵전쟁방지국제학회의사회(IPPNW,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주도로 결성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전 세계 반핵 시민운동의 네트워크로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금지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위한 세계적인 활동을 벌였다. <출처: ICAN>

지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8차 NPT 평가회의에서 핵무기금지협약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초 핵무기금지협약은 핵무기의 사용, 보유, 개발, 시험, 배치 및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무장의 폐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핵무기의 해체와 군축을 검증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보유국이 여기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자, 2016년부터 비핵국가와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일단 핵무기 금지에 초점을 맞추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추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15년 NPT 평가회의에서 107개국이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촉구하는 '인도주의적 서약'에 서명한 뒤, 2016년 12월 UN 총회에서 핵무기금지조약 협상 개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2017년 7월 7

2025년 1월 기준 UN 핵무기금지조약(TPNW) 현황



일 UN총회에서 122개국 찬성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이 성립하였습니다.

핵무기 전면 금지를 위한 조약 구상에는 대량살상무기 금지조약이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WMD)란 통상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를 가리킵니다.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는 각각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7년 발효)으로 금지되고, 어느 국가·집단이든 개발·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덕적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물무기 보유국 또는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자랑하거나, 페스트나 소아마비균이 정당한 공격무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NPT 체제에서 유독 핵무기에는 이러한 굴레가 없었습니다. 생물무기, 화학무기나 대인지뢰(1999년 대인지뢰금지협약 발효), 확산탄(2010년 확산탄금지협약 발효)과 같은 경우, ‘비인도적 무기’, 즉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남기거나 잔혹함으로 악명 높은 무기들 모두 사라져야 하는 무기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일단 사용을

금지한 다음, 제거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모든 나라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생산, 거래, 사용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이어 대량살상무기·비인도적 무기의 정점에 있는 핵무기에 굴레를 씌우려는 핵무기금지조약은 법적 구속력으로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합의입니다. 조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제조, 보유, 이전, 사용, 사용위협 등을 모두 금지합니다(제1조). 더 나아가 핵무기의 다른 국가 영토 내 배치도 금지하며, 조약 당사국이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제4조). 이러한 조치는 ‘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억지력을 통한 평화 유지’라는 기존 ‘핵억지론’ 논리를 정면 거부하고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세계 평화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2025년 현재 98개국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7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 9개국은 이 조약에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역시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보유국에게 핵무기비확산조약 제6조의 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압박하며, 궁극적으로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한국과 세계 각국이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3. 오늘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 이후 80년이 흘렀습니다. 80년 동안 핵무기가 다시금 사용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의 핵무기 반대 여론이 폭발적인 대중운동으로 조직되어 ‘핵무기는 비도덕적 무기’라는 발자취를 역사에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핵무기 반대 운동의 성과는 2차 대전 후 세계 핵 질서를 통제하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자리잡게 했고 더 나아가 핵무기 자체를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 노벨평화상(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수상) 발표 중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거의 80년 동안 전쟁에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와 다른 대표자들의 특별한 노력은 핵 금기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이러한 금기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

핵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들이 핵무기 획득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핵무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

내년은 미국의 원자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약 12만 명의 주민이 사망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후 몇 달과 몇 년 동안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화상과 방사능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날의 핵무기는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고 기후에 치명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은 우리 문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벨위원회는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피단협)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 이유로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핵무기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라는 ‘핵 금기’를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 그러한 핵 금기가 오늘날에 이르러 중대한 위기에 처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핵전쟁은 인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2025년 핵과학자회보는 인류 멸망을 상징하는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까지 89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47년 시계가 도입된 이래 자정에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처럼 위협이 고조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지속과 핵사용 위협,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핵보유국들의 군비 경쟁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비통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러시아가 참여를 중단한 가운데, 2026년 협정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를 한층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렵더라도 핵무기 반대 대중운동이 역사에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 가며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 네덜란드에서부터!” 1983년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55만 명의 대규모 반핵평화시위의 외침입니다. 42년 전 네덜란드에서 울린 이 구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핵 위기의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대중운동의 힘을 지금 여기서 모아야 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 한반도에서부터!”

핵무기 없는 한반도부터 만들자

DE KERNWAPENS
WERELD UIT:
beginnen



1983년 네덜란드 반핵시위 “핵무기 없는 세상: 네덜란드에서부터”
<출처: TROUW>

4부 핵무기 없는 한반도부터 만들자



1983년 네덜란드 반핵시위 “핵무기 없는 세상: 네덜란드에서부터” <출처: Trouw>

지금까지 핵무기란 어떠한 무기인지, 핵무기를 둘러싼 세계 역사는 어떠한지, 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해 세계 시민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시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핵 문제이지만,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핵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에는 수십 기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남한에는 그에 상응하여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4부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직접 연결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룹니다. 앞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네덜란드에서부터 만들자!”란 구호를 외쳤던 네덜란드 시민들을 본 것처럼,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시작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1. 한반도 핵의 역사

1) 미국 핵우산과 주한미군 핵무기의 역사

한국전쟁과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북부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은 한국전쟁 시기 내내 상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같은 해 10월 말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자, 미국이 주도한 UN군은 청천강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고 후퇴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국 행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같은 해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하는 대외전략을 채택한 뒤였습니다(NSC-68 문서). 이에 8월에 이미 B-29 폭격기 10기를 쏘에 급파하고 필요시 핵무기를 탐

재할 준비를 했습니다.

11월 30일에는 한반도에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는) 우리가 보유한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 언제나 원자폭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왔다”고 답하여 국제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핵무기 사용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사례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육군 참모총장이 된 정일권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소식을 “비장한 각오로 환영”하면서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산하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공산당 한 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도 이승만과 교감하며 미국 정부에 핵무기 사용을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1951년 7월 8일 정전협상이 시작되자, 미 합동참모본부(JCS, 미군 최고 군사자문기관)가 회담이 실패하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군사 압박을 강화할 모든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기밀 문서를 작성합니다(7월 13일 ‘Courses of Action in Korea’). 같은 해 10월부터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출격시킨 B-29 폭격기로 모의 한반도 핵공격 훈련, 일명 ‘허드슨 항구 작전’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루먼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우려하여 원폭 투하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승만이 이에 여러 차례 항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루먼의 뒤를 이은 아이젠하워 행정부도 한반도에 대한 원폭 투하 가능성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1952년 말부터 정전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핵 사용 위협으로 이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괌, 오키나와 등에 핵무기 투하가 가능한 B-29 폭격기 배치를 늘렸습니다. 인도 등 제3국을 통해 중국에 “정전협상이

붕괴된다면, 미국이 극단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달했고, 북한, 중국, 소련에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서를 보면, 1953년 4월에 정전이 실패할 경우 평양과 북중 국경 지역을 포함한 전략 목표에 대한 핵 공격을 검토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다행히 한반도 핵공격은 현실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반도 핵공격이 실현됐다면 한반도 민중과 자연이 엄청나게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소 간의 핵전쟁을 포함한 전면 확전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원폭 투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한반도 핵 공격이 실현되지 않은 데에는 3부에서 본 일본을 포함한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충격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 속에서 오히려 핵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반핵운동이 분출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3개월 전인 1950년 3월 19일부터 시작된 ‘스톡홀름 호소문’ 서명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호소문은 ‘모든 핵무기 금지’를 요구하며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국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지식인과 세계 각국의 총 2억 명 이상이 여기에 서명했는데,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기자”고 결의한 일본 평화운동 역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일본에서 600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부를 참고하세요.)

이러한 운동이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미 국무장관을 맡았던 헨리 키신저도 지적했던 사실입니다. 1부에서 소개한 일본 반핵만화 『맨발의 겐』에

서도 한국전쟁 중 한반도에 핵무기가 투하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주
인공 켄이 세상에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참극에 빠질 사람들이 또다시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과, 켄과 같은 생각
을 한 세계 시민의 노력으로 다행히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
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에 펼쳐진 미국의 핵우산과 전술핵무기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휴전이 이뤄진 뒤, 같은 해 10월 한미상
호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우산’
이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보복해주겠다고 공약함으
로써, 동맹국에 대한 적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미국 본
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동맹국에 대한 공격도 핵
을 포함한 각종 수단으로 억제하겠다는 ‘확장 억제’의 일환입니다.

시기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정책	주한미군 핵무기
1950년대	개념 도입	1958년부터 배치 시작
1970년대	적극적 확장억제	1958년부터 배치 시작
1991년	핵우산 유지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
2000년대 이후	북한 핵 대응 강화	전술핵 재배치 요구 간헐적 제기
2020년대	워싱턴 선언, 전략자산 순환 배치	재배치는 없지만 핵 협의 강화

핵우산 제공에 더해 한국으로 미군 전술핵무기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초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는 1953년 10월부터 채택된 ‘뉴룩’ 정책, 즉 핵무기에 대한 터부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조를 확립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는 대신 전술핵무기를 통한 억지력에 집중하는 미국의 새 전략과 관련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9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성 의원은 미국 정보공개법으로 공개된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자료를 토대로 1991년까지 한국에 배치됐던 미국 핵무기의 종류와 배치 장소 등을 밝혔다. 이 때 공개한 1978년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58년 어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8인치 박격포 등의 핵무기가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됐고, 이후 나이키 허큘러스 지대공 미사일 등 모두 11종류의 핵무기 시스템으로 늘어났다. 핵무기 수는 1977년까지 미사일과 핵지뢰 등을 합쳐 최소 453개 이상이었다. 최 의원은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과 도봉산 무기저장고, 춘천(캠프 케이지), 대전(캠프 에임스),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수원과 대구 공군기지 등 8곳도 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겨레>

주한미군은 1957년 7월 15일 핵무장화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1958년 1월부터 본격적인 핵무기 반입과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1958년 1월 30일, 유엔군사령부 공보과장 벤 리가리 중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술핵 발사체인) 어니스트 존이 장비되어 있다”고 밝혔고, “한국에 핵무기가 도입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

정하지도 또 부인하지도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NCND, Neither Confirm Nor Deny)”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인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같은 해 5월 1일 경기도 포천과 연천 접경에 있는 주한미군 세인트바바라 사격장에서 임진강 방향으로 어니스트 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한 이 행사를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는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규모와 구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1970~80년대 당시 학계와 언론 등은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950여 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으며, 그 종류도 단거리 미사일, 핵 지뢰 등으로 다양하다고 추정했습니다. 1975년 6월 20일,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슬레진저는 기존 NCND 정책을 깨고, 한국에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발표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슬레진저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것은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당시 상황이 북한에 무력통일 의지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발표였다고 밝혔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주한미군 전술핵 폐기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사거리 500km~5,500km) 폐기에 합의한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을 시작으로, 세계는 냉전 종식의 길로 접어들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1년,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술핵무기 감축을 골자로 한 ‘대통령 핵 구상’(PNI,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을 내놓습니다. 이는 기존의 군축협상과 달리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선행하여 상대국(소련)의 상응 조치

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부시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는 당시 상황에서, 소련이 급격한 정치적 변화로 핵무기 통제력을 잃을까 우려하여 소련의 빠른 핵군축을 이끌어내려고 이러한 구상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먼저 모든 해외 배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이를 미국 내에 비축한 동일한 무기와 함께 폐기할 것을 약속하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상응하는 조치들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조는 같은 해 말 소련 해체 후 들어선 엘친 행정부도 계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1991년 말까지 한국 내 모든 미국 핵무기가 철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8일,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 핵시설과 핵물질을 국제 사찰에 철저히 공개할 것이니 북한도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12월 31일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안”(한반도비핵화선언)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후로 북한의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지키고 있고, 1991년 이후 한국에 핵무기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근거로 미국의 핵우산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의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운명을 더욱 복잡하게 한 것은, 냉전이 끝나면서

주한미군 핵무기가 철수되던 시점에, 북한의 핵무장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역설입니다.

2) 북한 핵무장의 역사

탈냉전과 핵 군축의 시대에 홀로 핵 개발을 선언하다

많은 나라가 그렇듯 북한도 냉전 시기부터 궁극적인 자위수단으로 핵무장에 관심을 보이며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련이 건재해보였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의 요구로 NPT에 가입(1985년)하며, 소련이 달가워하지 않을 독자 핵무장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반도 내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대외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소련의 위기가 심화하고 중국과 동유럽이 개혁·개방에 나선 1980년대 말부터였습니다. 이는 1990년 한국과 소련의 수교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천명됩니다. 한소수교 계획을 통보받은 북한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기사로, “소련이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이때까지 동맹 관계에 의거했던 일부 무기들도 자체로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핵 개발을 사실상 공개 선언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이전부터 소련공산당 주요 인사들은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호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

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는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7년 미국 레이건 정권과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에 합의한 뒤로, 세계 각지가 탈냉전과 핵군축의 시대로 접어들 때였으므로, 여기에 역행하는 북한의 모습이 이상해보였던 것입니다. 소련은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으로, 이전까지 북한이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에 접어들자 결국 북한도 한반도의 탈냉전과 핵군축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1991년 9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정부가 남한 내 미국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며,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가서명하고, 1992년 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팀스피릿’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때가 역사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1차 북핵위기

그러나 희망의 시기는 짧았습니다.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한 보고서와 달리, IAEA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의심할 여러 정황을 발견합니다. IAEA가 미신고시설 사찰을 주장하자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사상 초유의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 사건이 이른바 ‘1차 북핵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북한 당국이 북측 본부를 통해 영향을 끼치는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비

핵지대를 주장하는 대신, ‘우리보다 강대국의 행태가 더 나쁘다’ 식의 수사를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2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NPT 탈퇴

1차 북핵위기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를 통해 일단락됩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동결하고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대신 북한에 대체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의 과거 핵무기 개발 의혹 해소는 대체에너지 제공 이후로 미루는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보유를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북한이 이를 시인했다고 발표합니다. 미국이 이에 따라 12월부터 대북 중유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주장이 오해나 왜곡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2003년 초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라크 침공을 개시했으므로, 이런 분석은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자주파 인사들은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북한의 초청으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둘러본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이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십 수 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밀접히 관련을 맺었던 파키스탄 핵 과학자와 정치인은 1999~2000년에 북한에 핵기술을 지원하고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부시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이자 제네바합의가 이행되는

기간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제네바합의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무시하고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자 회담의 붕괴와 1차, 2차 핵실험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9·19 공동성명(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하겠다고 약속)을 깨고 1차 핵실험(2006년 10월)을 단행한 후에도 6자회담은 계속 열렸습니다. 2007년에도 2·13 합의(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고, 5개국을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함)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연 북한이 핵 신고서의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를 거부하면서, 6자회담은 2008년 말 중단되었고 그 뒤로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9년 4월 미사일 실험을,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만약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정말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 때문이라면, 이때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 대신 핵·미사일 실험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진행한 북한의 모습은, 협상용 핵개발이라기보다 핵무기 보유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략적 인내’를 택하여 이후 8년 간 아무런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합니다.

3대 세습과 '핵무력 완성' 선언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그 아들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정권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북한의 노선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왔지만,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박차를 가합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이 벌어졌습니다. 2016~2017년은 특히 숨 가뻔했던 시기로, 2016년 1월 4차 핵실험, 9월 5차 핵실험,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신형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 실현’을 선언합니다. 한 달 여 뒤인 2018년 신년사에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김정은 위원장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세계를 긴장하게 했던 때였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의 일환인 ‘코피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피 전략은 북한의 핵시설 등을 선제 정밀타격하고 동시에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집결시켜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반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H. R. 맥마스터는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라고 말해 경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8년 초 평창올림픽 휴전이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완성’ 전략이 성공을 거둬 이러한 북미관계가 반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 합의 없이 결렬되었고, 그 뒤로 남북미 간의 실질적인 대화는 없습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핵심 대북제재들의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 외에 강선 등 다른 곳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는데,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던 해커 박사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은 이곳이 영변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주장이 사후적으로 입증되는 셈입니다.

2. 2020년대 한반도 정세: 북한 대남전략변화와 한반도 핵 경쟁

2020년대 한반도 정세는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선택한 ‘새로운 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이란 대남 핵 위협과 ‘통일전쟁’ 준비였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제로 한반도 핵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북한이 그러한 끔찍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남북한은)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통일·화해·한민족 개념을 지우는 2024년 북한 당국의 행보는 대

남 핵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같은 민족에게 핵 공격을 해도 되나”에 대한 사상적, 법적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1) 북한의 '새로운 길'은 남한을 겨냥한 핵전쟁 준비 태세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핵보유국’을 선언하며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고강도 대북제재를 버티며(‘자력갱생’) 핵무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남북 간 외교공관이나 다름없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2020년 6월)한 충격적인 모습에서도 예고된 바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 핵무기 개발’이 상징하듯, 남한과의 핵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대남용 전술핵무기 개발 선언

김정은 위원장은 1월 5~12일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최초로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선언. 전술핵무기란 통상 단거리 핵무기로, 미국이 아닌 남한,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후 북한 미사일 실험은 단거리 미사일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때 북한이 열거한 ‘핵무기 고도화’를 살펴보면, 미사일 방어망(MD)을 뚫을 수 있는 무기, 저강도 핵탄두를 탑재하여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인 무기, 상대의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 선제 또는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은밀성과 기동성이 있는 무기, 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에게 보복할 수 있는 무기 등으로, 미국 본토보다는 주일·주한미군과 한반도 전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후로 북한이 전술핵 운용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공개하거나, 전술핵 운용 훈련 사실을 공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2022년 3월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재개하면서 ‘북미 모라토리엄’, 즉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암묵적 합의를 먼저 파기하였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때문에 진보당조차도 “이번 발사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2022년 3월 25일 논평).

2022년 4월 북한 핵 교리 발표

2022년 들어서 과거와 다르게 북한의 핵은 남한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하고, 과거 북한의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폐기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4월 5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미국을 겨냥하는 핵’이라는 그간의 주장과 달리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북한 조선우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포한 '핵무력 법제화'를 기념하는 우표를 공개했다. <출처: 연합뉴스>

4월 26일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4월 30일에는 “모든 위협한 시도와 위협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분쇄하고 제압하기 위해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종합하면, 군사적 상황만이 아닌, 북한 당국이 판단한 포괄적인 ‘근본 이익’이나 ‘모든 위협한 시도와 위협’에 대하여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남한도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2022년 9월 8일 핵무력 법령 발표

이러한 흐름은 9월 8일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에서 정식화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건국절'인 9월 9일을 하루 앞두고,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라고 육성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공개했는데, 이 법이 규정한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쟁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입니다. 이는 즉,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라도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위협에 처한다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말 또한, 외부로부터 실제 공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곧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판단만 있으면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이 법은 핵무기라는 '절대병기'의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어,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였고, 그 결정 권한을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전적인 핵 태세,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드는 모

습은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2013년 ‘자위적 핵보유법’에서 핵무기를 ▲핵전쟁 억제 수단 ▲선제핵타격에 대한 보복 수단 ▲핵공격 방어 수단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나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2년 핵무력 법령은 북한 정책 내에서도 큰 변화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남반부 전 영토 점령'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전군지휘훈련' 공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3년 3월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가 실시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 내용을 공개했는데, 평안북도 철산군 발사장에서 발사한 전술핵 시험용 탄 두 장착 탄도미사일이 800km를 날아가 동해 상공 800m 고도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특정 고도에서 폭발 가능한 핵·미사일 탑재용 탄두부를 시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킨 것은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험으로, 사거리 800km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 8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군사회의회에서 지도 위 서울 부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라”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8월 31일 노동신문은 한국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한미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응하여 “남반부(남한) 전 영토 점령”과 “해외무력개입 파탄”을 목표로 하는 ‘전군지휘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30일 심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대한민국 군사강패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해 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실전용 핵’을 추구하는 북한의 핵 전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실제로 한반도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남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입장은 대개 남북한 간 재래식 화력 차이와 한미군사동맹의 존재를 고려하면 북한이 개전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고도화는 미국 본토에 핵 위협을 가하여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전술핵무기를 통해 남한의 재래식 화력을 제압하는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르는 명칭) 최초 시나리오가 핵 위협을 통해 서방의 직접적 개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와 비무장화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목표였던 것과 유사합니다.

북한 당국이 밝히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핵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전술핵무기)을 계룡대와 같은 남한의 군사적 “중요 지휘 거점”에 투하하여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고 ‘핵 공포’를 불러일으켜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미국 본토에 ICBM을 발사하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하여 “해외무력개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26~30일 김정은 위원장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對敵)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 데 대하여",
'국가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방침 발표**

김 위원장은 남한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것들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며 대남기구와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간 말해 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전략 전환. 현실적으로는 한국과의 어떤 대화도 당분간 전면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북한이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남북한을 ‘2국가 2민족’으로 다루는 모습은 이미 1990년대부터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 통일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북한) 제일주의’로 대체하고 있음이 이전부터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별개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별개의 민족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대남 핵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같은 민족에게 핵 공격을 해도 되나” 하는 북한 내의 여론을 통제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 정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 실제로 한국과의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물리적 준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이미 2023년에 준비가 완료되어 어느 때든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7차 핵실험의 목표는 전술핵무기의 실전화를 위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검증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이 ‘평화통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북한 전역에서 통일, 민족 등의 단어를 쓰지도 못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지도를 북한 지도로 수정하고,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 구절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김일성의 통일 유훈 상징물인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꼴불견’이라며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나 민족화합을 지향하는 이들은 김 위원장의 처사를 강력히 비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주파 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스스로 정당성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2023년~2025년 북러군사협력 심화와 러시아의 대북제재 무력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북한은 러시아를 옹호했고, 러시아는 UN 안보리에서 북한 규탄안의 채택을 막는 식으로 화답해왔습니다.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탄 북러관계는 2024년 7월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로, 김 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동맹 관계에 올라섰”습니다. 푸틴도 “1961년 북소동맹조약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자주포, 방사포 등의 무기를 러시아에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원 없이는 러시아가 전쟁 수행이 어려울 만큼 북한 무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2024년 10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북한군 파병이 시작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 역사상 첫 대규모 지상군 국외 파병입니다. 그 대가로, 11월 벨로루소프 러시아 국방장관,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 등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러 간 군사,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12월 16일, 미국 정부가 북한군 사상자 발생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같은 시기 복수의 러시아 군사 블로거, 텔레그램 채널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구절이 포함된 북러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공식 발효한 만큼, 향후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화한 북러군사협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동참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UN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2024년 4월 30일 대북제재위가 사실상 해체된 것이 한 예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용어 사용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했

습니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제공한 인공위성 기술 덕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추정되는데, 이처럼 러시아는 기술 이전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화 수입이나 경제협력보다도 이러한 군사기술 이전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고자 한 핵심이익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도 북러 합동군사훈련, 러시아 핵잠수함의 원산항 기항, 북러 방공망 통합 등 더욱 과감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남한 핵무장론의 부상

2024년 6월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가 군사동맹 부활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한 뒤, 한국 핵무장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쏟아져나왔습니다. 수년간 핵무장론을 주장해 온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월간조선 등 여러 언론이 유례없이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잠재적 핵능력 보유(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연료 재처리 등)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능력 구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사실상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주장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해 7월 당 대표 경선과 맞물려 핵무장론을 쟁점화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은 미국 정가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찬동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엘리슨 후커, 카토연구소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의 최근 《포린 폴리시》 기고글,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북러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의 기조와 맞물려 급격한 한국·일본 핵무장 실현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수세력 일각의 바람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론조사에서 남한 핵무장 찬성은 60~70%대를 기록해왔으며, 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나 통일의 의지는 역대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말~12월 중순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77.6%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지에 대해 48.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76.6%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남 핵 위협 강화와 비핵화 대화 거부라는 현실과 연결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6월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들은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남북

남한 핵무장론에 관해

핵무장의 여러 개념을 구분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장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독자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독자 핵무장

이는 남한의 NPT 탈퇴와 독자 핵무기 개발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NPT를 가입했다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부과와 남한의 고립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나 미국 전문가 일부 등은 NPT 10조(“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를 근거로,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비상사태’이므로 한국의 정당한 NPT 탈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 중입니다. 당장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지렛대로 수년에 걸쳐서 설득하고 인정받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인도의 선례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미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실험을 한 인도와 결국 핵 협정을 맺고 인도가 국제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인도에 핵 기술과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1991년 미국은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같은 해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란 다시 미국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한미 간 NATO식 핵 공유

NATO 회원국 일부(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지만 관리 운용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고 훈련도 함께 합니다.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은 NATO 국가들도 미국의 핵 정책 및 운용 협의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한미 핵공유란 한국도 미국과 이러한 핵 공유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됩니다. 일본은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46톤으로, 핵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조선일보 등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의 '핵주권'을 제한하고 미일원자력협정과의 차별이므로 한국도 일본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잠재적 핵 능력 보유', '핵 잠재력' 등도 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흔히 '핵잠수함'(핵잠)이라고 불리는 잠수함은 핵무기 탑재 여부가 아니라 동력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 엔진 가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배출되는 탄소를 방출해야 하며, 연료도 보급해야 합니다. 엔진 가동에 따른 소음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탐지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없고 몇 달 동안도 떠오르지 않고 작전이 가능해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핵잠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핵잠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핵잠에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가능한데,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10월 7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실제 핵추진잠수함 건조 정황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가 여기에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보수세력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잠수함(심지어 핵무기를 탑재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과 2021년 미국, 영국이 호주와 대(對)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을 체결하고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기술을 전수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한국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신뢰를 확대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당시 해군 당국이 대북용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핵군형과 무장평화”를 말하며 “한미 핵 공유,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나경원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핵무장을 결단, 실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겠다고,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고려하냐”는 뉴시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미는 NPT를 강력히 지지하며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NPT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조하는 것도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3) 2020년대 미국의 한반도 정책

2021~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트럼프 1기가 끝난 뒤 취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군사력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는 명분으로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핵 확장억제’를 내세우는 것으로, 전후 미국의 전형적인 노선으로 복귀였습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 남한 핵무장론을 통제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여 ‘북미 모라토리엄’이 파기되자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은 2016년 12월 북핵 대응을 위해 출범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래로 축소·취소되었던 한미군사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래로 멈춰있던 미군의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한반도 전개 또한

재개했습니다. 특히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한미 공동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확장 억제’란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포함한 개념이지만, 이를 명시함으로써 북핵을 핵으로 억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미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했습니다.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한국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된다고 강조하면서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늘리기로 했는데, 실제로 폭격기와 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2022년에는 5회, 2023년에는 17회나 전개되었습니다.

2024년 6월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북러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여는 조항을 포함하자, 한미 당국은 NCG 논의를 근거로 7월 11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유사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 자산에 처음으로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 문서입니다. 일체형 확장억제란 미국의 핵전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더해 핵 운용 관련 정보공유·협의·기획·연습 및 훈련·작전 등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미동맹이 ‘핵 동맹’으로 나아갔다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CNI,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더하는 것을 뜻함) 방안을 적용한 훈련과 범정부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국방·군사 핵우산 운용 연습(TTX)을 연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군사훈련에도 북한이 핵 공격을 해왔을 시의 시나리오가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인 2025년 4월에도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 ‘아이언 메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CNI는 비핵국가가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선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북한의 ICBM 개발로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 과감히 핵우산을 사용할지에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과 소련의 ‘핵은 핵으로 억지’한다는 전략이 인류 공멸의 길을 열었을 뿐인 것처럼, 강도 높은 군사 조치가 한반도 평화를 열리는 만무합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한편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승리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크게 바뀔 전망이 대두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한 당사자였고, 대선 기간에도 이를 자신의 성공적인 외교정책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반도 정책을 소상히 밝힌 적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핵 위협을 서슴지 않는 푸틴을 배려하며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책임을 간접적으로 지워주었고, 김

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즐기치게 언급해왔습니다. 1기 때와 달리 북한과 ‘스몰딜’을 맺는 것에 반대할 세력도 여당인 공화당과 행정부 관료 내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북미 스몰딜이 타결될 가능성이나, 혹은 가자지구 개발 계획과 같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안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자 “미국과 협상으로 갈 만큼 가봤지만 확인한 건 공존 의지가 아니라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이었다”고 발언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로는 ‘적대적 대북정책 철회’라는 대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쪽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2월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각각 또는 둘 다 끝나면 우리(트럼프와 김정은)는 (협상에) 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번째 임기를 시작한 올해 1월 20일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나는 북한과 잘 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 직후에는 미국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갈등,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 등 숏한 국제 사안을 고려하면, 적어도 2025년 내에 북미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모두 트럼프의 호언장담과 달리 휴전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도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핵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행보를 고려하면, 양측의 의지가

있으니 북미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문제에서 생각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서둘러 북미대화를 개시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을 낳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도 ‘북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예측불허의 트럼프가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이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국제 사회에 큰 혼란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폭발할 것입니다. 반대로, 북미대화가 재개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트럼프가 느끼게 되면, 첫 임기 때 대북 선제공격(‘코피 작전’)을 고려했던 것처럼 오히려 더 강경하고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북핵,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2025년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핵전략은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의 중대 쟁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1부에서 핵무기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인도적이며 반민중적인지 보았습니다. 이것이 핵무기 자체의 특성인 이상, 북한 핵무기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노동운동 안에는 다른 핵무기와 달리

‘북한의 핵은 특수하게 보아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주장들이 있는가?

북핵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근본 원인이다"

옳든 그르든 북한이 핵무장에 나서게 된 책임은 미국의 대북위협에 있으므로, ‘근본 원인’인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되어야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진보 진영이 북핵 포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적대정책 변화 없이 북한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강대국의 지배논리에 순응하는 것이며, 이는 진보정당의 노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장창준, “[통합]진보당은 북핵을 옹호하는가-[통합]진보당 당원, 현재 판결을 말한다⑤”, 《통일뉴스》, 2015.02.05.). 이러한 태도는 노동운동의 역할을 북한 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 즉 본연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이 아닌,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로 한정 짓습니다.

"미국부터 비핵화하라"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먼저 비핵화(핵 포기)를 하여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북한도 비핵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해야만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은 이를 ‘세계 비핵화’라고 표현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세계 비핵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되었고, 3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세계 비핵화 투쟁”이라는 표현을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생산·반입·사용, 폭격기와 잠수함 등 핵자산 전개와 핵전쟁 훈련에 반대”로 고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한 전교조 대의원의 원안 지지 발언은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미루는 논리를 잘 보여줍니다. “학폭 가해자의 고데기는 뺏지 않고 학폭 피해자 문둥은의 고데기만 빼앗는다면, 이것이 정의이고 평화인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부터 폐기해야 한다.”

"북핵 덕분에 전쟁이 안 난다"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 덕분에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억제되고 우리 민족이 미국으로부터 자주를 쟁취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30일 사월혁명회가 주최한 월례발표회 “북의 핵 보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북의 핵무기는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며, 통일을 완성하고, 세계 비핵화와 연동되어 미국 제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

‘세계 비핵화’란?

‘세계 비핵화’란 전 세계 모든 핵무기가 사라지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부장은 “세계 비핵화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경제 병진 노선은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며 영구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언뜻 모순적인 이러한 발언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준다면 2003년 탈퇴한 NPT로의 복귀 등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핵확산 통제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기존 핵보유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전 세계의 비핵화’를 논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비핵화 주장은 실제로는 한반도·동북아시아·전 세계 비핵화 구상을 추구하는 맥락에 있기보다는 북한도 핵을 갖게 해달라는 명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제6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모든 나라가 NPT 체제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므로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는 우리 민족 공동의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전쟁 반대’나 ‘비핵화=평화’ 담론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무력을 동원한 무력통일도 통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통일 포기”와 “남조선 평정 대사변”을 선언한 2024년에 들어서, 평화통일의 방도가 없다면 북핵을 통한 무력통일을 분단 해소와 해방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4일 6.15남측위원회 주최 정책포럼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전망>에서 장창준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대사변’은 그 자체가 통일이다. 구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인 시기를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터널은 지나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분단 체제라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또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서 “전체 인민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강, 벽, 산을 넘는 중이다. 그 과정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 ‘대사변’이란 전쟁을 통해 평정한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통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나 우리는 모든 핵무기가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북핵이라고 해서 ‘정의의 핵’이나 ‘민족 공동 자산’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북핵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핵

무장은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선택이었고, 한반도 민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불가피하지 않았다

① 앞서 보았듯 북한의 핵무장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억압과 봉쇄”가 두드러졌던 냉전 시기가 아니라, 세계가 핵군축, 개혁·개방으로 나아간 탈냉전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도 한국 내 미국 핵무기가 철수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이뤄졌습니다. 북핵 개발은 이런 흐름에 어긋납니다. 북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0년대에는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했으나, 정작 한반도 비핵지대가 실현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핵무장을 택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무장은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개혁·개방 노력 없이도, 동유럽과 같이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택한 길로 볼 수 있습니다.

1차·2차 북핵위기, 6자회담 등 실제 비핵화 협상의 역사를 보아도, 북한은 스스로 한 비핵화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겨왔습니다. 2003년 북미 제네바합의가 파기되기 이전부터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한 것이 한 예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본격화한 것은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1998년, 2006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펼 김대중-노무현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과연 북한이 핵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군사적 위협을 느꼈던 시기일까요?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이었습니다. 과연 이때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선제 침략전쟁을 일으킬 정세라고 느껴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섰을까요?

② 미국의 핵 패권과 “적대시정책”에 맞서는 비핵평화의 길은 분명히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대신 핵무장을 선택하고 남한 민중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를 방어적인 것, 불가피했던 것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반미(쿠바, 베네수엘라 등), 비핵 약속국들과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NPT, 비핵지대조약, TPNW(핵무기금지조약) 등을 통해 강대국들의 핵 패권 해체를 요구해왔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반대하며 세계 반핵평화운동과 연대할 필요성을 생각하면 우리 노동운동도 이러한 대안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도 1990년대, 2000년대에 남북한 간 한반도비핵화선언이나 6.15 공동선언,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길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남북협력과 평화군축 노선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거나,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밟기로 합의가 되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합니다. 국제사회의 여론과 제재 체계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여론에서도 그러합니다. 2019년 초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임기 말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실 과거 자주파도 한반도비핵화선언, 6.15 공동선언, 햇볕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하려면,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해

평화공존을 모색하려 한 자신들의 과거 입장은 오류였다고 평가하고 더는 6.15 공동선언 이행 등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① 현재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공화국의 국체”라고 부를 만큼 핵보유 자체를 정당화하고 비핵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평화통일 방안을 무기한 폐기한 대신, “핵무력 등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도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선제 핵공격법, ‘통일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이에 따른 핵전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핵을 단순히 협상용이나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북한 정권의 행보와도 맞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발사에서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나 아니냐와 별개로, 김 위원장이 자식을 공개하고 미사일 실험에 거듭해서 대동하는 것은 ‘3대 세습’을 넘어 ‘4대 세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권력 세습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이후 시대에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땅도 크지 않은 한반도에서 핵을 동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과 가족, 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초토화되고 피폭된 지역도 한반도 내에 생길 것입니다. 북한의 핵전략은 한반도 민중과 평화에 현실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끔찍한 핵전쟁이 일단 벌어진 이후에 명분과 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더 도덕적으로 악인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민중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지지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노총 강령에 명시되었듯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② 북한 당국이나 자주파 일각은 북한의 핵이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위한 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핵무기 자체가 무력충돌과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며 정당한 핵무장은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책의 앞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주파의 주장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날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 핵을 억제하여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거나, 미국 핵을 완전히 해체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면, 냉전 와중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한 김일성, 미국 부시 행정부와 6자회담을 한 김정일, “내 아이들이 평생 핵 이고 사는 것 원치 않는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를 걸고 북미정상회담을 한金正은은 전부 심각한 전략적 오류가 있었던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핵의 존재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동아시아(한국·일본) 배치와 일본의 재무장,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 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러가 ‘군사동맹’에 가까워진 2024년 북러정상회담 이후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핵무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장 찬성 여론도 60~70%를 육박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만약 실현된다면 좁은 한반도 안에서 두 개의 핵무장국이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될 것이며,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남북한 동시 핵무장이라는 사태를 막

기 위해서라도 북핵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세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북핵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에 명확히 반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 민중의 바람과 어긋난다

① 최근 북한 정권은 스스로 비핵화 대화의 조건으로 들었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의미 없다며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심지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조차 대화를 재개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마음만 먹으면 10여 시간이면 전개가 완료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병력을 재투입하여 재개하는데 20일이면 충분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오는 데는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 이런 것 따위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8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에게 군사력 강화나 핵무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이를 통해 정권의 영구적인 안전보장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태도를 쫓아가는 것을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자발적인 평화운동의 요구보다 우선시하면, 결국 한국 사회운동의 반핵평화운동 과제

는 북한 정권의 노선에 종속될 것입니다.

②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민중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탈냉전 포기과 핵 개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등 대기근과 경제난으로 이어졌고, 현재에도 북한 핵 개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낳아 경제난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 시설 주변 지역에서 기형아 출산과 암, 결핵, 백혈병 등 발병(일명 ‘귀신병’)이 급증하는 등 토지와 주민의 피폭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언도 탈북민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주민의 식량위기와 보건위기 와중에 이뤄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를 악화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고강도 대북제재와 경제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식량과 보건 환경 개선에 쓰일 수도 있었을 어마어마한 자원이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22년 들어 6월 5일까지 총 17회(방사포 제외)에 걸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3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이에 든 재료비, 기타 비용과 인건비를 합치면 총 4억~6억5000만 달러(5000억~8125억 원)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북한 전체 인구에 접종하기 충분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쌀 51만~84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간한 『2022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4%를 군사비에 지출해 163개국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2021년도 마찬가지). 미 국무부의 『2021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도

2019년 북한이 GDP의 14.9%~26.4%(43억 1천만 달러~110억 달러)를 군사비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세계 170개국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1년 연감』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평균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은 2.4%로 북한의 1/10에 그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민중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 민중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핵전쟁의 참화는 피하고 싶은 것이 남북한 민중의 공통적인 바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식량과 보건 안전 역시 세계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왜 한반도 비핵화인가

본래 한국 민중운동의 구호인

'한반도 비핵화'를 내버린 자주파

아직 주한미군 핵무기가 존재하던 1980~1990년대 초반, 한국 민중운동의 대표적인 구호는 '반전반핵', '한반도 비핵지대화'였습니다. 당시 많이 불리던 노래가 상징적으로 “반전반핵 양키고함”이란 가사의 ‘반전 반핵’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나면 민족 공멸일 수밖에 없다

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 같은 노래도 있습니다.

1992년까지만 해도 범민족대회 결의문에 ‘한반도 비핵화 투쟁’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조속한 이행’ 등이 포함되었고, 당시 여러 집회에도 주요 구호로 등장했습니다. 1991년 당시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남북 불가침선언을 위한 범민족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미국과 소련이 상호 핵군축에 합의하고 세계에 탈냉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서도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며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남북 불가침 명시) 채택, 남북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서명, 1992년 초 한미 ‘팀 스피릿’ 군사훈련 중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노동운동은 이러한 흐름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이 1차 북핵위기(1차 한반도 핵위기)를 일으키며



1991년 8월 1일 고려대 학생회관 앞에 범민족대회 사수를 위해 모인 대학생들. 사진 왼쪽 위에 “반미 비핵 군축” 구호가 보인다. 이 시기 범민족대회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전쟁 반대, 핵 반대”와 같은 구호들이 자주 등장했다. <출처: 경향신문>

노래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

1990년 포크 그룹 '노래마을'이 발표한 2집 앨범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에 실린 노래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는 백창우가 노랫말과 가락을 만들었는데, 노랫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
핵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

단추 하나만 누르면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하루 아침에 가루가 된다네 단추 하나만 누르면

지구같은 별 하나 쯤이야 지구같은 별 하나 쯤이야
송두리째 박살난다네 지구같은 별 하나 쯤이야

사람들아 우리 작은 힘을 모아 저 큰 어둠을 이겨내세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세상을 만드세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면 팀 스피릿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하였고, 북한은 남한에 배치되었던 미군 핵무기의 철수를 확인하고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핵 관련 시설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미 당국은 1992년 봄으로 예정된 팀 스피릿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고 5월에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습니다. IAEA는 1993년 1월까지 여섯 차례 사찰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달리 이미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의심할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IAEA는 미신고시설 사찰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사상 초유의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북한은 IAEA의 사찰 요구가 “미국의 거짓 정보제공과 압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IAEA가 NPT 체결국인 북한에 특별사찰을 촉구한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3월 20일, 북한이 NPT에 복귀하면 ①팀 스피릿 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 ②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국가시설 (미군기지 포함)에 대한 핵사찰을 받아들일겠다 ③북한에 핵공격을 가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겠다 ④남북 간 교역을 확대하겠다 ⑤한국, 미국, 일본이 대북 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발표합니다. 4월 2일에는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을 경우 남한 내에 있는 군사기지와 미군기지의 IAEA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에는 북한의 NPT 복귀, IAEA 특별사찰과 함께 남북 상호핵사찰을 실현할 것을, 8월 3일에는 이를 위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명시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한국과 미국이 봉쇄·고립 전략을 고수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제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졌습니다. 1993년 범민족대회를 보면 남측과 해외 측이 제출한 결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되었지만 북측 결의문에는 없었고, 결국

남북기본합의서란?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문서로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남북한의 상호 체제 인정, 상호불가침, 교류와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차 한반도 핵위기와 맞물려, 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란?

1992년 1월 20일 남북한이 합의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입니다. ▲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 다 ▲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공동선언을 깨뜨리고 핵무장에 나섰으나 남한은 현재까지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동결의문에는 북측의 의견이 관철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일언반구 없고 대신 “핵 문제를 빌미로 한 외세의 부당한 내정간섭 중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자주파의 활동에서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지향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를 분열시킨 자주파의 북핵 옹호

자주파 주류는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노선으로 나아가며, 노동

운동과 진보정치에 여러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민주노동당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2006년 1차 북핵실험 당시 당 중앙위에서 자주파는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초래한 것이며 북한의 자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실험 ‘반대’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가로막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당을 분열시켰습니다.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로는, 2017년 민주노총 중앙 통일선봉대 자료집에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실전배치된 조건에서 여전히 ‘북핵불용’,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의 목표로 삼는 주장은 현실성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분단 체제가 강요해온 대결의식과 자기검열을 떨쳐버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운동에 다함께 나서야 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었다가, 민주노총의 기존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받고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2024년 민주노총 사업계획도 ‘한반도 비핵화’ 대신 ‘세계 비핵화’라는 표현을 택하면서,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세계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구실일 뿐

자주파의 ‘세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대북위협 역사로 정당화된다,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 그 원인인 미국의 위협이 사라져야 해결할 수 있다. 미국 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 집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핵을 정당화하면, 결국 모든 핵을 철폐하는 것은 요원해집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집단이나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는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일본에도, 홀로코스트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라는, 당사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과거를 근거로 핵무장 추진을 정당화하는 우익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역시 미국의 핵우산만 믿을 수도 없고, 일본의 핵 능력에 뒤처지는 것이 분하고,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때문에 불안한 보수 세력이 오랫동안 꿈꿔온 것입니다.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핵무장을 추진했다 포기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동 내 앙숙 관계인 이란과 이스라엘 등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국가는 역사, 영토, 종교, 지역 패권 문제를 내세워 핵무장을 검토했습니다. 과거 중국과 소련(러시아)도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핵무장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폭, 경제 침체, 환경 파괴는 처참했습니다. 무한 핵 군비경쟁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핵무기는 인류 절멸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반대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 사례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핵무기 철폐 운동을 무력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았듯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소련, 중국 핵은 미제의 핵과 다르다’는 주장은 일본 반핵평화운동을 심각히 분열시켰고, 결국에는 이러한 입장은 폐기되었습니다. 정당한 핵무기란 없으며 모든 핵무기는 세계 핵 경쟁 강화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늦게라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외세의 억압을 당해온 한민족이 미제의 핵에 맞서

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역사의 비극을 인식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에 연대한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핵무장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혹은 팔레스타인의 핵무장이 중동 평화를 낳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핵무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역사를 근거로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것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불과하며, 이는 인류의 미래에 대단히 위험한 효과를 낳습니다. 현실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두 번째 한국전쟁이나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방아쇠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민중을 억압하는 북한의 핵무기

자주파식의 ‘세계 비핵화’는 당면한 쟁점들을 비껴가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핵무기든 핵무기인 이상 절멸의 무기, 비인도적 무기, 반민중적 무기라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핵 개발을 택하고 NPT를 뺀 채 나온 대가로 북한 민중이 치룬 희생은 대기근과 경제난을 비롯하여 어마어마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북한 당국이 채택한, 남한과 일본을 사거리 안에 두는 전술핵무기 개발 노선과, 그에 따라 셀 수 없이 반복되어 온 동해상으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국과 일본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

는 세력이 북한의 핵무장에 문제 제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75년 전 이미 수백만 명이 희생된 전쟁의 아픔을 겪었는데, 두 번째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참혹한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핵무기 철폐의 필요가 이렇게 절실한 만큼, 어떻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것인지를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외쳐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독자 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을 노리는 보수세력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위배됩니다. 즉, 한국은 한반도비핵화선언 폐기를 선언하고, 북에 한반도비핵화선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대중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라는 구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를 민중의 염원으로 만들어야만, 한국 핵무장론과 한미 ‘핵동맹’ 강화 반대를 다수 여론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마치 존재하지 않거나 이것이 단순히 한미동맹의 반작용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여론 다수를 설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이 이미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폐기한 셈이므로, 한국도 폐기해도 된다는 게 남한 독자핵무장론이나 전술핵재배치론입니다. 그러니

사회운동은 우리까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깨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만들고 핵무장을 저지해야 합니다.

더욱 완전한 한반도·동아시아 비핵화를 지향하자

진정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남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요구를 더 확대, 발전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① 남한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이 지상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핵무기를 탑재한 군함이 영해로 들어오거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라든가, 핵무기를 탑재한 군용기가 (착륙하지 않고) 영공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언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부산항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미군은 핵무기 탑재 여부를 공개하지 않음)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입항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하여, 일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결의나 조례제정 등을 통해 그 지방을 비핵화하는 ‘비핵자치체 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핵자치체인 고베에서는 1975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 결의를 통해, “고베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비핵 고베 방식’이라고 합니다. 2019년 한국에서도 이를 참

고하여 “부산시 비핵평화조례 제정 운동” 등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②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는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이르러서야 문서에 명시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그러나 북미 제네바합의 역시 북한의 핵 개발로 폐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바라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앞으로 미국의 핵우산 문제도 다뤄야 합니다.

③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로 나아가려면, 한반도 비핵화는 전제조건 내지는 동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동북아 비핵지대로 나아가는 구상은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 사회운동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동북아 비핵지대로 나아가고, 일본의 비핵3원칙과 평화헌법을 지켜내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군축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5. 핵무기 없는 세상, 한반도부터 시작하자

다시 한번, “핵무기 없는 세상은 네덜란드에서부터 만들자!”라는 구호를 생각해봅시다. 이는 핵무기 없는 세상은 누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핑계 삼아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부터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진리를 담은 구호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정세를 어떻게든 풀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러한 정신이 아닐까요?

세계에는 그러한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3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냉전 시기 핵전쟁으로 공멸 위기에 몰린 동서유럽 시민은 서로 빌미 삼아 비핵화를 회피하는 대신, 핵무기로부터 전 유럽을 해방하기 위해서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독일이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비핵화를 외쳤습니다.

과거 전쟁과 학살, 식민 지배를 경험한 많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국가 대부분도 이를 명분으로 핵무장을 택하는 대신, 비핵지대조약이나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공격을 당한 베트남, 쿠바, 멕시코, 파나마, 팔레스타인 등의 나라도 이러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1부에서 설명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당사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2010년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은 인류의 종말을 뜻합니다. (...) 미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의 죽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항상 말하는 ‘부수적 피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핵전쟁이 벌어지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부수적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자고 주장합니다!”

(피델 카스트로, 2010년 10월 15일)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카스트로 의장은 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를 발견하여 위기가 발발하자 소련에 핵무기 사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쿠바인들은 “쿠바가 사라져도 사회주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

하기도 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반미를 위해서 핵전쟁을 불사한 결과 수억 명의 인구가 핵전쟁으로 죽게 되었다더라면, 그것이 과연 사회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세월이 지나며 그 역시 이렇게 느끼고, “모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폐기”를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그는 한반도 위기야말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로 가장 심각한 핵전쟁 위협이라고 말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디 전쟁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괴억압국가, 괴억압민족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함으로써 강대국의 핵독점과 핵위협을 억지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핵 경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선도적으로 핵무기 금지를 선언하고 강대국에게 핵군축을 압박하는 길입니다. 이는 세계 반핵평화운동이 걸어온 길입니다.

반핵평화의 길은 이미 있다: NPT 평가회의, 비핵지대, 핵무기금지조약

오늘날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UN 가입국(190개국)이 NPT에 가입하여 이에 따라 핵무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NPT를 무단탈퇴한 뒤 핵무장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이니, 이러한 북한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NPT의 틀 안에서 NPT 평가회의를 활용하여 핵군축 상황을 검증하고, 지역별로 비핵무기지대를 확립하여 상호 간의 잠재적 핵 위협과 핵무기 보유국의 위협을 최대한 배제하고, NPT를 뛰어넘는 핵무기금지조약을 추진하는 식으로 핵무

기 보유국에 핵군축을 압박해왔습니다. (NPT 평가회의, 비핵지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해서는 3부를 참고하세요.) 우리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도 핵 개발로 맞대응하자고 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 남북한과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등을 주장하고, 이를 매개로 일본 등 해외 민중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NPT 체제에는 한계와 모순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하여 NPT가 보장한 ‘공식’ 핵무기 보유국들은 그 존재 자체가 모든 핵무기의 철폐라는 NPT의 궁극적 지향과 모순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NPT 제6조에 명시된 핵군축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인도 등의 핵무장을 묵인 내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핵 확산 통제(NPT) 체제에 균열을 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국제 핵 확산 통제 체제가 정말로 무력화된다면, 수많은 나라가 단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핵무장을 시도할 것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할 때, 이 조약이 없었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었던 능력을 갖춘 나라는 이미 수십여 개에 달했습니다. 지금 NPT 체제가 붕괴한다면 그때보다 더 큰 혼돈이 올 것입니다. 강대국의 핵 패권은 문제지만, 이는 강대국의 핵 폐기를 압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십 개의 핵보유국이 등장하고 무한 핵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야말로 인류에게 너무나 위험천만한 미래입니다. 국제조약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과, 이미 여러 국가 간에 성립한 약속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NPT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현실의 ‘통과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세계 곳곳

핵무기금지조약과 NPT의 관계

핵무기금지조약은 NPT와 배치되지 않으며, NPT의 한계를 넘어 발전시킨 조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래로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는 피억압국가, 피억압민족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핵무기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여 선도적으로 자국의 핵무기 금지를 선언함으로써 강대국의 핵독점 해체를 압박하는 길을 택해왔습니다.

물론 이 역시 단숨에 전 세계의 핵무기를 철폐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는 아닐 것입니다. 공식·비공식 핵무기 보유국들을 어떻게 이 조약에 동참시킬 것인지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핵무기금지조약은 국제적 반핵평화운동을 확대하는 매개가 될 수 있으며, 점점 많은 나라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에서 극우 포퓰리즘을 포함해 반동적 정치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격변하는 국제정세는 핵 확산과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동적 정치운동과 만나 서로를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노동해방 평등사회로의 변혁 전망은 핵전쟁의 위협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40여 년 전 “네덜란드에서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친 네덜란드 시민들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에서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나서는 모습은

분명 세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분단과 한반도 핵 위기의 당사자이자,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국이라 특히 그럴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한반도, 동아시아, 전 세계의 핵무기의 폐기를 견인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여 봅시다.

소책자를 마치며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 반핵평화운동과 함께하는 한반도 반핵평화운동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현실 사회주의 붕괴와 그 이후 새로운 사회운동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핵경쟁을 벌인 소련은 세계 반핵평화운동을 분열시켰고, 세계를 위협하는 절멸적 핵전쟁 위기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이 정당했다거나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련이 핵 경쟁에 뛰어들면서 현실 사회주의 내부로는 평화주의적 국제주의 대신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강해졌고, 이는 소련과 소련의 핵우산 아래 있는 국가의 인민에 대한 억압을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소련의 핵무장은 여러 모순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소련의 붕괴를 앞당긴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그렇다면 현실 사회주의 붕괴 후 새로운 사회운동은 반핵평화운동의 가치, 특히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탈냉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지는 대신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동아시아 정세 대응에서도 핵무기 반대 대중운동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또한 다른 모든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군비경쟁과 전쟁을 촉발하는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동은 정세에 적합한 대응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모든 핵무기 반대’를 명확히 해야 미국의 핵우산, 남한의 핵무장 시도, 북한의 핵무장 모두에 반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핵전쟁 유발 요인이라고 보고, 극도의 비인도성과 인류 절멸의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핵무기 일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세계 반핵평화운동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화한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핵 위협, 다시 개시된 핵 군비경쟁을 보면,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은 탈냉전 직후보다 2025년 현재에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운동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2025년은 한반도 해방 80주년이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자만을, 일본에서는 후자만을 강조하면서 잊혀 온 것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존재입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피해자 중 한반도 출신은 사망자 5만 명, (당시) 생존자 5만 명, 총 10만 명으로 전체의 1/10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수는 경상남도 함천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한국도 피폭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이는 핵무기 앞에서는 국적이나 이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일제를 패퇴시킨 원폭을 찬양하고, 각각 미국과 소련의 핵 정책에 의존하는 세월 속에서, 남과 북, 좌와 우를 막론하고 핵무기 반대보다는 핵무기 숭배가 한반도에 자리 잡았습

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길 것”을 결의한 반핵평화운동이 일본의 재무장과 역사 왜곡을 저지하고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을 지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수폭금지‘세계대회’라는 명칭이나 피단협(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2024년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알 수 있듯 국제 핵무기 철폐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일본 시민의 70% 이상이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찬성하고, 2025년 현재까지 일본 전국 지자체의 38%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하는 등 일본 사회의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잊고 산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을 수십 년 전부터 지원하고 연대한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을 “식민지배와 전쟁의 가해자면서, 피해자인 척 한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피폭국’이라고 내세우면서 정작 핵무기금지조약과 같은 핵무기 철폐 운동에는 앞장서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반핵평화운동이 거세게 비판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핵 군비경쟁이 부활하고 북한이 “핵은 국체”임을 선언하며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반핵평화운동의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배울 것은 배울 때가 아닐까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비핵·평화를 실현하는 데에 한일 사회운동의 연대는 빼놓을 수 없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식민지배와 피폭이라는 아픔을 동시에 겪었고, 한국전쟁 당시부터 오늘날까지도 핵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야말

로 가장 선도적으로 모든 핵무기 철폐와 피폭자와의 연대를 외쳐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들이 해야 할 선택은,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 강대국들에 맞서서 ‘전 세계 비핵화를 달성’하자며 핵 경쟁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금지를 선언하여 강대국들에 핵군축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과거 식민지 국가, 제3세계 국가들이 비핵지대를 형성하고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한 사실은 그러한 길이 이미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웃 일본과 세계의 반핵평화운동과 함께하자

2025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는 5천 명 이상의 일본 시민과 수십 개국에서 온 수백 명의 활동가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사용 위협이 만연해진 상황에서,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점점 더 시급한 과제가 된 핵무기 철폐를 촉구하는 여론을 조직하여 강대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세계대회를 시작으로 올가을 UN총회, 2026년 NPT 평가회의와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 대응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도 올해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하여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번 소책자 발간을 비롯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한반도에서부터 만들자!”고 외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열어가는 데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소책자를 마칩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고승우 외, 1985, 『핵과 한반도-반핵운동의 논리』, 아침
- 김태형, 2019,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서강대학교출판부
- 류광철·이상화·임갑수, 2005, 『외교 현장에서 만나는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평민사
- 백진현 편, 2010,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오름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5,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세계정치, 22호
- 안준호, 2018, 『핵무기와 국제정치』, 열린책들
- 우정무 외, 1985, 『핵과 한반도』, 아침
- 이만석·함형필, 2024, 『미국의 핵전략』, 플래닛미디어
- 이삼성, 1998,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한길사
- 이삼성, 2018,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 이영희·임재경 편, 1988, 『반핵』, 창작과비평사
- 정옥식, 2010, 『글로벌 아마겟돈』, 책세상.
- 정옥식, 2012, 『핵의 세계사』, 아카이브
- 황영채, 1995, 『NPT, 어떤 조약인가』, 한울.
- Andrew Futter, 2016, 『핵무기의 정치』, 명인문화사

- 존 루이스 개디스, 2002,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사회평론
- 존 루이스 개디스, 2010,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 폴 브래큰, 2014, 『제2차 핵 시대』, 아산정책연구원
- 케네스 왈츠, 스콧 세이건, 2022, 『핵 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박영사
- 워드 월슨, 2014, 『핵무기에 관한 다섯 가지 신화』, 플래닛미디어
- 와타나베 다카시, 2023, 『슈퍼파워 미국의 핵전력』,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세르히 플로히, 2022, 『핵전쟁 위기』, 삼인
- E.P. 톰프슨 외, 1985, 『반핵의 논리』, 일월서각
- 피터 헤이즈, 1991, 『핵 딜레마』, 한울
- 나카자와 케이치, 2000, 『맨발의 겐』, 아람드리미디어.
- 히다 순타로, 오쿠보 겐이치, 2015, 『생명을 살리는 반핵』, 건강미디어협동조합.
- 나가이 다카시, 2021, 『나가사키의 종』, 페이퍼로드.
- E.P. 톰프슨, 『반핵의 논리』, 1985, 일월서각
- Conze, Eckart and Martin, Klimke and Jeremy, Varon, 2017, Nuclear Threats, Nuclear Fear and the Cold War of the 1980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 보고서

- 김민식, 2020,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군사 117호, 2020. 12.

김보미, 2019,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2024, 「러시아 핵독트린 개정의 함의와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재엽, 2016, 「냉전 후기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INF) 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군사 第101號, 2016. 12

김재엽, 2022,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적 억지’ 전략」, 전략연구 통권 제88호, 2022. 11

김정섭, 2022,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세종연구소

김정섭, 2023,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세종연구소

김태현, 2018, 「핵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군사 108호, 2018. 9.

김현욱, 2018,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 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문수언, 2000, 「러시아의 새로운 억지정책과 핵전략」, 슬라보학보 제15권 1호

문수언, 2010, 「러시아와 미국의 핵전략 관계와 핵확산방지체제에 서의 함의」, 중소연구, 2010, vol.33, no.4, 통권 124호

성일광, 2015,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변화와 그 함의」,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2015. 10

알렉산드로바 에카테리나, 2021, 「탈냉전 전략 핵무기 감축을 둘러싼 미·러 협력의 동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논문

양동숙. 2018.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원수

폭 금지운동』, 『기억과 전망』, (38), 206-254.

양희용, 2022, 「탈냉전기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와 핵정책 변화」, 신아세아, 29권 4호 (2022년, 겨울)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백선우, 2022, 「소련과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62집 3호 2022

이동기, 2015, 「유럽 냉전의 개요 - "탈냉전"의 관점에서」, 『세계정치』, (22), 17-66

이병철, 2021, 「핵무기금지조약(TPNW)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소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성훈, 2022,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1998, 「미국·서유럽 국가들간의 중거리핵무기(INF) 논쟁과 NATO의 이중결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수형, 2019,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와 동북아 정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진욱, 2022,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협상 의의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제11집 제4권

이행선, 2023, 「1980년대 초중반 핵전쟁의 위협, 핵전쟁 서사의 인류 종말과 핵 불감증」, 사이間SAI, 35호

정은숙, 2020, 「New START의 미래와 글로벌 전략안정성 전망」, 세종연구소

정은숙, 2020, 「글로벌 핵비확산레짐 50년」, 세종연구소

제성훈, 2020, 「크림반도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안보전략과 군사독트린」, 평화학연구, 제21권 4호(2020)

태희준, 2023, 「한국전쟁과 핵 금기 퍼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논문

하세가와 사오리, 최규진. 2023. 「일본 반핵운동의 뿌리를 찾아서 -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의 기원」. 의료와사회, (13), 162-185.

Arbman, Thornton, 2003, Russia's Tactical Nuclear Weapons, SWEDISH DEFENCE RESEARCH AGENCY

Arushi Singh, 2023, Russia's Nuclear Strategy Changes or Continuities, Journa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vol. 14, no. 2

Cole, 1996, Atomic Bombast_Nuclear Weapon Decisionmaking in Sweden 1945-1972, The Henry L. Stimson Center

Forrest E. Morgan et al., 2008, Dangerous Thresholds, RAND

Heather Williams, 2024, Why Russia Is Changing Its Nuclear Doctrine Now, CSIS

Holger Nehring, Benjamin Ziemann, 2012, Do all paths lead to Moscow, Cold War History Vol. 12, No. 1, February 2012, 1-24

Lawrence S. Wittner, 2000, Reagan and Nuclear Disarmament, BOSTON REVIEW, July 12, 2000

Lawrence S. Wittner, 2010, The Nuclear Freeze and Its Impact, Arms Control Association

Lyle J. Morris, Rakesh Sood, 2024, Understanding China's Perceptions and Strategy Toward Nuclear Weapons, ASIA Society

Michael J. Mazarr, Ivana Ke, 2024, Integrated Deterrence as a Defense Planning Concept, RAND

Nikolai Sokov, 2002, Why Do States Rely on Nuclear Weapon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Summer 2002

NTI, 2024,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Seamus Peter, Johnstone Macleod, An assessment of Gaddis' suggestion that MAD secured a 'long peace', SEAMUS PETER JOHNSTONE MACLEOD, NOV 2 2011

Susan J. Koch,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of 1991-1992,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 V. PAUL, 2010, Taboo or tradition?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in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010, 36,

◎ 사회진보연대

김진영, 2020, 「2020년, NPT를 넘어 핵무기금지조약으로」,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 봄

김진영, 2023 겨울, 「탈냉전 시대의 종말 이후, 세계와 한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 겨울

김진영, 2024, 「2025년 국제·한반도 정세전망」,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 겨울

김진영, 2025,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 1998~2025년」,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5 여름

박준도, 2005, 「핵전쟁과 핵확산, 비극의 역사」,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2023,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

임필수, 2019, 「한국전쟁 이후 냉전기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1960~1987」,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 여름

임필수, 2019, 「한소 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NL·PD 논쟁의 격돌」,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 겨울

임필수, 2020, 「1990년대 한반도 정세와 통일운동 개괄」,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 봄

임필수, 2024,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통일안 폐기, 어떻게 볼 것인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 여름

임필수·김진영, 2020. 「1990년대 한반도 정세와 통일운동 개괄」 독자에게, 「2020년, NPT를 넘어 핵무기금지조약으로」 독자에게,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 가을

임필수 외, 2023, 「25주년 기념좌담」,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 겨울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사회진보연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사회위기를 가속화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고 연대임금·연대고용을 매개로 노동 운동을 혁신하며,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권 실현과 한반도·동아시아의 비핵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회진보연대 후원하기

후원계좌 | 기업은행 057-034981-04-017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노동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는 회원, 후원회원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도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 스캔으로 후원!



사회운동웹진, <사회운동포커스>



#정세초점 #노동보다 #국제동향 #기획연재 #비평 #민중건강과사회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cialmovementfocus

텔레그램 | t.me/socialmovementfocus

▶ QR 코드 스캔으로 텔레그램 채널 구독!



계간 사회진보연대 구독 안내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정세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입장과 과제, 방향과 정책에 대해 연구합니다. 사회운동 · 노동조합의 교육 · 토론에 활용할 교육자료를 정선하여 전달합니다.

《계간 사회진보연대》는 1년에 4회 발행됩니다. (3· 6· 9· 12월)

01. CMS 정기출금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www.pssp.org)에서 구독 신청
신청 이후 첫 발행월부터 3개월 마다 15000원씩 출금

02. 무통장 입금

전화 (02-778-4001) / 이메일 (pssp4001@gmail.com) 로
신청 후 구독료 송금

구독료: 1년 (60,000원), 2년 (110,000원), 3년 (150,000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208-155464-04-026 사회진보연대

“2025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는 5천 명 이상의 일본 시민과 수십 개국에서 온 수백 명의 활동가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사용 위협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서,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점점 더 시급한 과제가 된 핵무기 철폐를 촉구하는 여론을 조직하여 강대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세계대회를 시작으로 올가을 UN총회, 2026년 NPT 평가회의와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 대응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도 올해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하여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번 소책자 발간을 비롯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한반도에서부터 만들자!”고 외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열어가는 데 동참할 것을 기대합니다.”



1983년 네덜란드 반핵시위 “핵무기 없는 세상: 네덜란드에서부터” © Trouw